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

| 주제 |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시 2023. **11. 1.**(수) 14:00~16:30

장소 원주 인터불고호텔 제우스헤라홀

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



프로그램

제1부 사전행사		
10:40~12:00	현장견학: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2:00~13:00	오찬	
제2부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개회식		
	개회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환영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4:00~14:30	인사말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축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주제발표		
	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14:30~15:15	주제발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 대응 :
		발표 1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 연계 검토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발표 2 기회발전특구 추진동향과 지역의 대응방안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발표 3 기회발전특구: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휴식		
15:25~16:30	자유토론	참여 국책연구기관장
폐회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



① 목차

개회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2
환영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4
축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6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8
	원강수 원주시장	10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12
발표 1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 대응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 연계 검토	15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발표 2	기회발전특구 추진동향과 지역의 대응방안	31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발표 3	기회발전특구 :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47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개회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입니다.

오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자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축사와 발제, 토론 등을 위해 직접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지역 및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루는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각종 세제·규제·금융 혜택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와 현장 컨설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소망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 일 재

환영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 이곳 원주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을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역시 오늘의 행사에 동참해주었습니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일재 원장님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김광수 원장님 그리고 양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에는 원주시 김태훈 부시장님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여러 원장님들이 직접 참석해주셨는데,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국정목표를 구체화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 정책을 비롯하여 9대 정책과 5대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증대시켰던 초중양집중화의 문제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균형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대책들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들은 지금껏 중앙으로의 초집중화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중양집중화의 문제는 이제 지방인구 유출 및 저출생의 인구감소 문제와 결합되면서 그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 시대적 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역전시키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중앙과 지방 격차의 축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던 정책은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노력(현재 행복도시 세종시)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주도된 정책이라 할 수 있었고, 그런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한껏 발휘되거나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조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래로부터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Top-down식'이라 한다면,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Bottom-up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좋은 발표와 귀중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정책이 초중양집중화를 저지하는 한편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오늘 포럼의 자리가 강원도의 원주이니만큼, 이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발전 정책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2023. 11.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축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 실현을 위해 현실성 있는 실행전략 제시를 위한 자리인,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이 공동으로 개최되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님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저성장 고착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경제의 활력저하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산업의 경쟁력과 수도권과의 혁신역량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전체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의 50%를 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1,000대 기업의 87%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 제도입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방시대 정책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지방인구 유인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계획수립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특구를 지정하고, 파격적인 세제지원, 규제특례, 투자활성화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투자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에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발전을 가로막아온 4대 규제(산림, 환경, 국방, 농업)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성을 담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전략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은 물론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과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방향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전략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축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혁열입니다.

지방분권과 인구소멸지역 대응방안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 포럼」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이 공동으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포럼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과 발표에 나서 주신 주제 발표자 및 좌장, 토론패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전부 개정되어 작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난 30여년 간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주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지방의 자율성이 커지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더욱이, 한 발짝 더 나아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규제와 희생을 강요받으며 항상 변방에 머물러있던 강원도가 지방분권과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하여 도약할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가 찾아 온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앙보다는 지방의 역할과 관심은 더욱 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지방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국가가 발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특별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그 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날 지방자치 기조에 맞춰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지속적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별 장점과 능력을 발휘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혁열

축사



원강수
원주시장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 공동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및 경제의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상향식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감면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기적절한 제도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사통팔달 연결된 교통망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초인접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부 내륙 중심의 경제·산업도시라는 이점을 발판으로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하여 우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바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AI, 첨단국방 과학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가고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개소한 반도체 교육센터를 비롯해 주요 신규 반도체 및 의료산업인 반도체소모품 실증센터(20억 원),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30억 원), AI기반 K-디지털헬스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0억 원) 사업이 '24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어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기공식을 가진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대규모의 신규 산단 추가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상 중이며,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도시의 확장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유치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제도인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에 한걸음 가까워 질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 포럼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
원주시장 원강수

축사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안녕하세요, 원주시의회 의장 이재용입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이 공동으로 원주에서 열리게 되어, 큰 영광과 기쁨을 느낍니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이번 포럼은 우리 지역의 경제와 미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원주시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님께서서는 이처럼 중요한 주제로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혜택, 그리고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이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제 지원부터 거주 환경 여건의 향상에 이르기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기업과 그 구성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경쟁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의 미래 경제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이 탄탄해지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위한 선의의 경쟁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이 포럼이 미래 발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

원주시의회 의장 이재용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



발표 1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 대응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 연계 검토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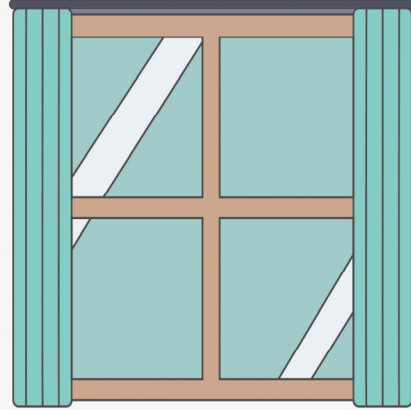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포럼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 대응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 연계 검토

2023.11.0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이 서 회



CONTENTS

- I 기회발전특구 제도 개요
- II 기회발전특구 법적 근거와 설계(안)
- III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연계 검토
- IV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역할
- V 결론

01

기회발전특구 제도 개요

1.1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개념

기회발전특구 개념

-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도구이자 수단

기존에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공모사업의 지역 발전 방향을 새로운 특구인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주체를 전환하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임(나강열, 2022)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고민, 낙후지역의 지역 개발을 지방과 민간 혜택의 재투자 플랫폼 구성을 목표로 규제, 세제 및 교육 특구 기획을 상향식(bottom up)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1.2
기회발전특구
윤석열정부의 기회발전특구 특징

1 기회발전특구의 신청부터 운영까지 모두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일부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단편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사람이나 기업의 이동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관점 하에서 운영하는 제도임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거점 대학 활성화, 교육기관 등의 활발한 유치, 주택공급 등과 맞물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이서희 외, 2022)

3 기회발전특구는 낙후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4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다른 특구와는 달리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특징을 가짐

5

1.3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핵심

- ✔ **지방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
 인수위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는 첫째, 지방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장전략에 따른 특화 모형을 설정하는 것임
 -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이 주도하고, 그에 따른 규제와 세제혜택을 설계·제공함
- ✔ **개인과 기업의 자연스런 지방 이전으로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 전환**
 개인과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발전전략을 취함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2022.04.27.)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및 법인세 획기적 감면”을 예로 들고 있음
 - 특구에 이전하여 투자한 개인과 기업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이연 및 감면하여 다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의도임
- ✔ **민간자본을 활용한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추진**
 민간자본을 활용한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추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 및 지방에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함
 -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 환경 및 맞춤형 인력양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과 연대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음

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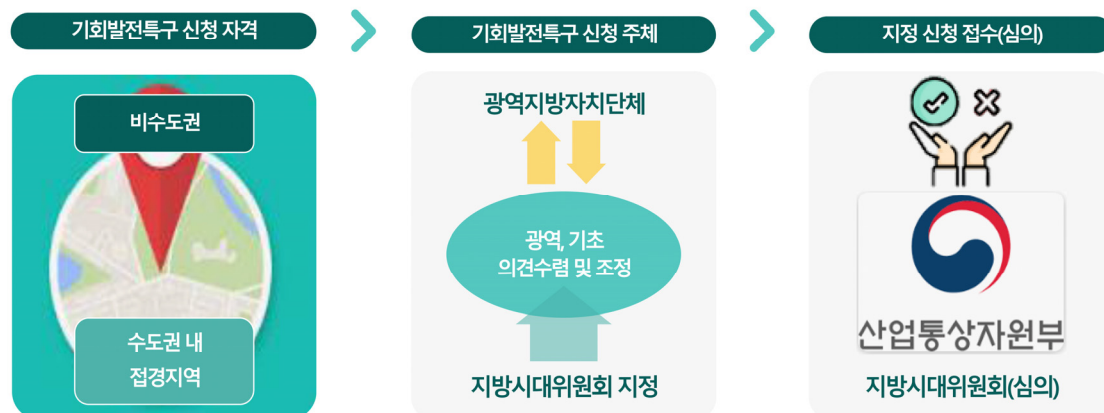
기회발전특구 법적 근거와 설계안

2.1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추진 개요(1/2)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상 추진 개요



2.1 기회발전특구 추진 개요(2/2)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상 추진 개요

신청대상

- 1) 「산업입지법」상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 2)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
- 3) 「연구개발특구법」상 연구개발특구
- 4) 「혁신도시법」상 혁신도시
- 5) 「기업도시법」상 기업도시
- 6) 지역혁신융복합단지
- 7)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사항

-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 2) 근로자 등의 정주환경 확보·연계 가능성
- 3) 필요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유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 4) 개발의 경제성이 있을 것
- 5) 지역 내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 6)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기회발전특구계획 내 포함사항

-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 2) 특구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 3) 개발 및 관리방법
- 4) 산업 육성전략
- 5) 지원계획
- 6)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2 세계·규제·금융·기타 특례 추진안(1/2)

구분	내용
세계 지원	투자재원 마련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 거주 및 이전하고 양도금액의 50% 이상을 5년(7년, 10년) 이상 거주 및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관련 세부담을 50%, 70% 및 100% 감면 · (중여세) 기회발전특구 내 거주 및 창업하고 증여가액의 100% 이상을 5년(7년, 10년) 이상 거주 및 투자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50%, 70% 및 100%를 감면
	투자(경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및 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 및 투자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 간 50% 감면 · (기업 승계세) 사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기회발전특구로 복귀 시 조건 충족 없이 해외자산 처분 관련 감면(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 · (개인의 금융소득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거주 개인 투자자가 가칭 "ODZ 펀드"에 투자한 후 받는 금융소득을 전액 비과세
	투자종료(처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간이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 기회발전특구 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관련 양도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감면 · (상속세) 기회발전특구 주가 기간 동안 투자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이 기회발전특구에 거주할 경우 기업을 승계받는 경우(피상속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요건)에는 상속에 따른 상속세 100% 감면
규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제자유특구 수준의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의 규제 적용 특례) 적용 · 현행 규제자유특구 수준의 규제혁신 3중세트(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적용
금융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회발전특구 지역까지 확대 · (유형) 중견기업까지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 (지원비율) 현행과 달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하게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특회계의 30% 이상을 기회발전특구 추진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성격으로 이양시켜 기회발전특구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범위) 기회발전특구 지역 추가 · (우대조건) 기회발전특구 지역 입주기업 지정 · 3가지의 우대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기존 우대 지원비율보다 높게 설정(5%p 에 2%p 를 추가하여 7%p 를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으로 광범위하게 설정)

2.2

기회발전특구

세제·규제·금융·기타 특례 추진안(2/2)

구분	내용
공공기관의 지급보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국고 및 지방보조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재정악화 및 신용도 부족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을 지원방안이 있음(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급 보증제도 활용)
부지제공 기반시설 조성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본점 및 공장 등의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공급 국유재산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의료분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확보 시책의 마련 지역의료 대학의 강화와 지역우수병원의 지정·지원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레저·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과 특례 교육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 이주 개인의 교육지원 이주 개인의 지원
문화·관광·레저·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과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회관/관광시설/도서관/박물관/레저·체육시설 등 설치/유치 보조 이용료 및 관람료 등 50% 이상 감면
교육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지방이전 전의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의 특례를 규정
이주 개인의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특별지역에서의 지방대학의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권 대학 등 학교 등록금의 60% 이하가 되도록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각급학교, 민간 단체와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관련 평생 교육과정의 개발이 촉진
이주 개인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이전 한 사람의 정주 여건의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주택 신축, 주택 개·보수 및 주택 임차) 지방이전 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 우선 공급 출산장려금의 지급, 취업의 알선, 일자리·창업 지원

11



2.3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추진체계 종합



12



2.3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방향 제시

본 연구에서 구상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 기본 방향

-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구개발(bottom-up), 민간자본의 투자, 특화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구개발: bottom-up) 특화산업 선정, 특구지역의 지정 및 투자유인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함
 - (민간자본의 투자) 특구 내 특화산업에의 투자자는 개인과 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제·규제특례·금융 지원 등 투자유인을 제공함
 - (특화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특화산업 수요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교육기관 및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따른 최소한 책임성의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이행이 요구됨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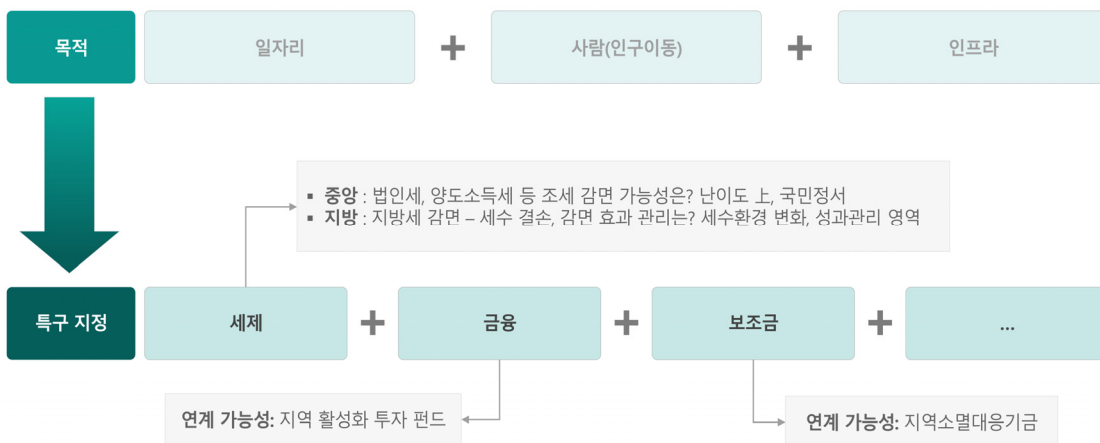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연계 검토

3.1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조건



15

3.2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 고려



16

3.3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1/3)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컨셉 (1/2)

- ✔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역투자 패러다임 제시
- ✔ 재정이 마중물 역할 + 민간자금과 금융기법 활용
-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을 담보하는 사업 중 일정 수준의 재무성이 예측되는 분야를 타겟 영역으로 제시

그간 지역투자 사각지대

- ✔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도모

출처: 김상기(2023).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지방투자사업 발표자료

17

3.3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2/3)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컨셉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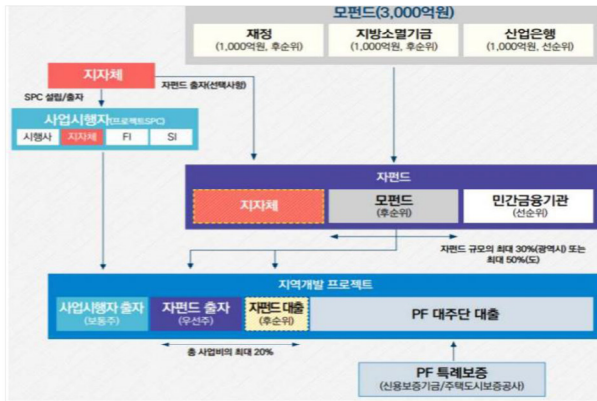
- ✔ **재원: 기본 1/n 방식에서 $\sum_{i=1}^n$ 로 구성**
 -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재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 및 금융 기법을 결합하여 사업 재원 마련
 - Project financing(PF)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
- ✔ **사업선정 방식**
 - 1단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 상생하는 민간이 Bottom-up 방식으로 사업 발굴(공공성 담보)
 - 2단계: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사업자 담보)
 - 민간 참여가 필수임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민관합동추진 방식임을 고려할 때 공익성 없는 수익성 사업은 제외 가능성 존재
 -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분양 사업 또한 제외 가능성 존재
- ✔ **리스크 분담**
 - 1단계: 공공(중앙재정+지방재정)이 사업의 아랫단 재원을 받쳐 주며, 민간 투자자의 부담 경감
 - 2단계: 투자 사업의 안정적 수요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
 - 3단계: 안전적 PF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

출처: 김상기(2023).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지방투자사업 발표자료

18

3.3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3/3)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 구조



제도 유사성 정책 연계 가능성 매우 높음

기회발전특구 민간 투자 활성화 목적 부합

투자 아이템 발굴 중요도 유사

대규모 투자와 이윤 창출 병행 유사 등

자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IR, 기획재정부
출처: 김상기(2023),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지방투자사업 발표자료

04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역할

4.1 기회발전특구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아이템 발굴(1/3)

기회발전특구 아이템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구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정성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준(안) (중소기업벤처부)	
지역 특성	일반여건	지역의 경제·환경·생활 여건의 강소특구 유치 충분성	지역의 특성, 여건 활용 정도
	네트워크	지역의 국내외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 수준	-
	역량·지원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국가 R&D수행, 전문인력·기관 수준의 타당성 지역의 산업발전·성장 가능성 및 관련 서비스 수준의 타당성 지역의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 현황,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
사업 계획 수준	계획의 적절성	배후공간 개발계획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위치·면적·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정책적 연계성	지역이 보유한 핵심기술·산업과 강소특구 육성방향의 연계성·부합성	혁신성 및 성장 가능성 등(세부사업 구성·내용의 성장가능성, 산업간 연계성)
	내용의 구체성	-	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유치 가능성 규제특례 및 규제 샌드박스(필수요소) 부작용 최소화 방안(필수요소)
	사업의 효과성	지역의 강소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참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준

지역 여건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작성하는 것 필요

지역 여건 분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아이템 발굴 필요

민간 투자 가능성, 확장 가능성, 정책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군 고민이 필요

4.1 기회발전특구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아이템 발굴(2/3)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 선정기준 수립 제안(안)(1/2)

● 지역적 특성 부합성 + 상위 발전계획 연계성 + 지정기준 충족도 ●

예시

선정기준	세부지표
I. 지역적 특성 부합성	지역 여건(지리, 교통·도시구조, 산업·경제, 역사·전통·문화, 생태·환경 등)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인가?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된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는 00시의 지역적 여건에 맞는 산업인가?
	특화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필요한 00시 소재 대학과의 산학연계 및 교육체계 구축이 가능한 산업인가?

	특화산업의 지속 및 발전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투자유인을 위해 필요한 정주여건, 교통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사람의 이동, 기업유치 등이 가능한 산업인가?
00시 소재 기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인가?	
00시의 지역경제 발전(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매출증가 등)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 그리고 인구유입 등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4.1 기회발전특구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아이템 발굴(3/3)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 선정기준 수립 제안안(2/2)

● 지역적 특성 부합성 + 상위 발전계획 연계성 + 지정기준 충족도 ●

예시

선정기준	세부지표
II. 상위 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 상위 발전계획 등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인가?
	• ...
III.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준 충족도	• 충분한 국내의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한 산업인가?
	• 근로자 등의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한 산업인가?
	• 특화산업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한가?
	• 특화산업의 추진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
• ...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5 결론

5.1

기회발전특구

종합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음

01

대 목표를 위한 정책적 연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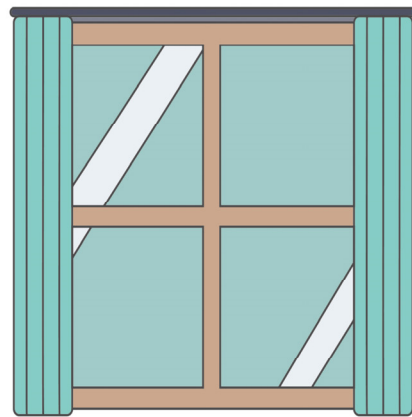
각 수행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 ●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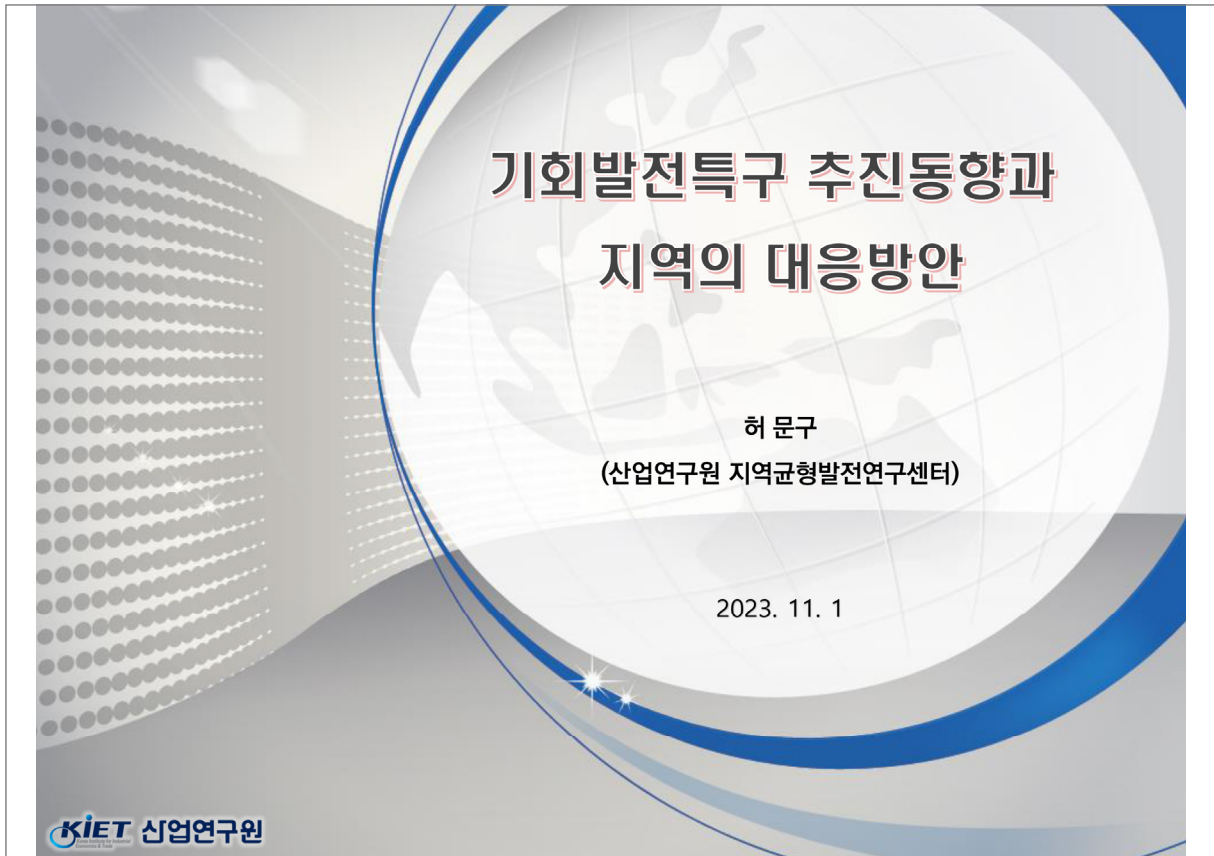


발표 2

기회발전특구 추진동향과 지역의 대응방안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목차

KIET 산업연구원

- I** 균형발전을 둘러싼 지역현안
- II** 균형발전의 구조적 문제와 기회발전특구
- III**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추진동향
- IV** 지역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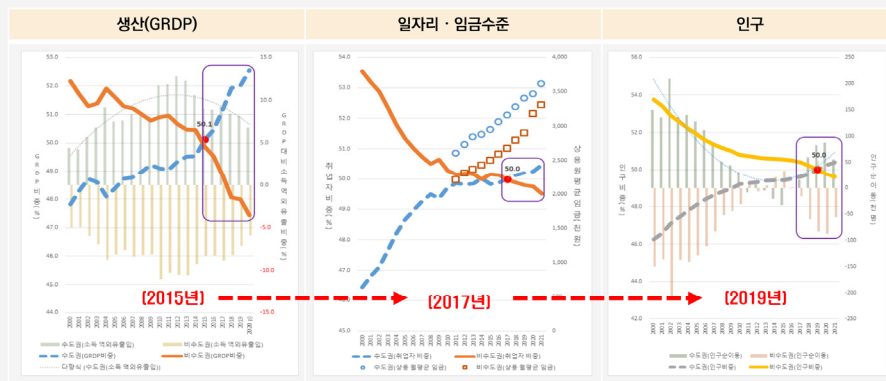
I. 균형발전을 둘러싼 지역현안

KIET 산업연구원

1 12%가 88%를 삼키는 공간적 불균형

12 > 88

“지방에는 **모이(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동지(주택)**이 없는 세상”



I. 균형발전을 둘러싼 지역현안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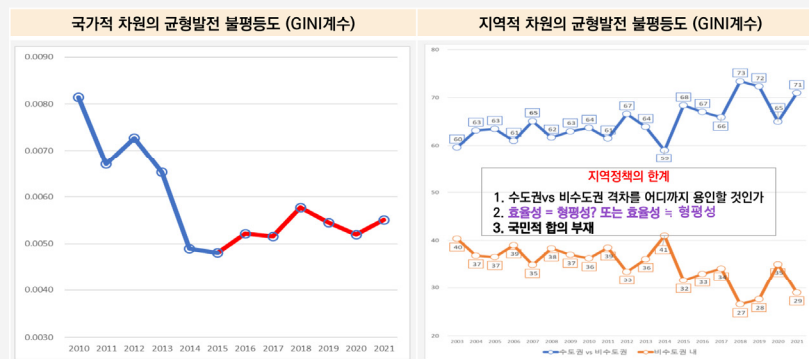
2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 (국가적 차원) 2015년까지 지역 간 불평등 축소

- ‘10년 대비 ‘21년 균형발전 불평등도는 85% 수준까지 감소하는 추세

➤ (지역적 차원) 수도권 vs 비수도권 불평등 확대

- 수도권 vs 비수도권 간 격차는 70%대로 확대 (‘18년 : 73%, ‘19년 72%, 전국 전체 불평등=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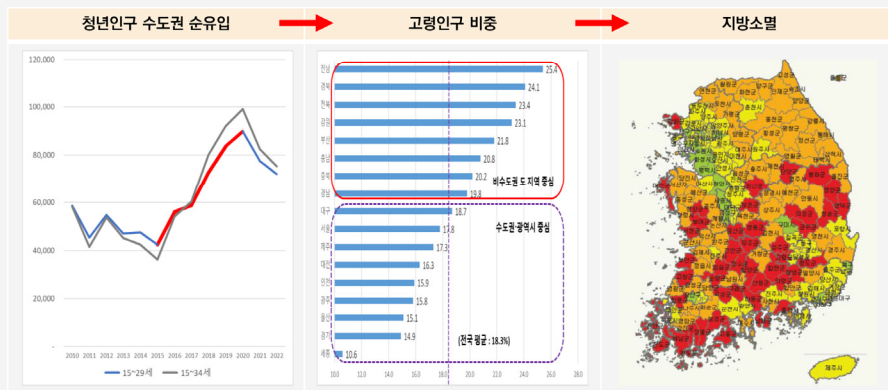
I. 균형발전을 둘러싼 지역현안

KIET 산업연구원

3 지방 몰락의 위기

지역경제 악순환 경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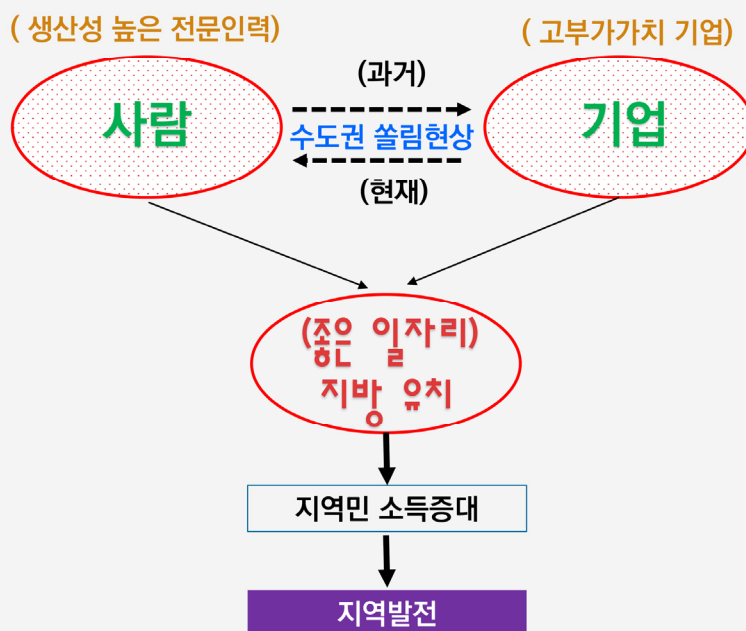
“청년 유출 → 인구조로(고령화) → 지방소멸 가속화”



II. 균형발전 구조적 문제와 기회발전특구


KIET 산업연구원

1 균형발전은 사람과 기업의 문제



Ⅱ. 균형발전 구조적 문제와 기회발전특구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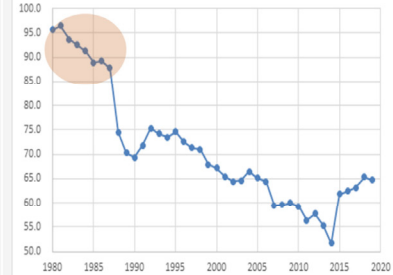


“청년들은 1차 노동시장을 찾아 고향을 등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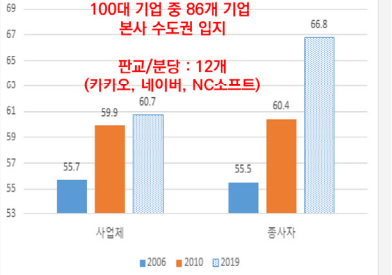
(= 대기업 및 공공부문 : 수도권 입지)

(좋은 일자리)
= 높은 임금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300인 이상 기업 수도권 비중



Ⅱ. 균형발전 구조적 문제와 기회발전특구

3 고급인력과 고부가가치기업 수도권 집중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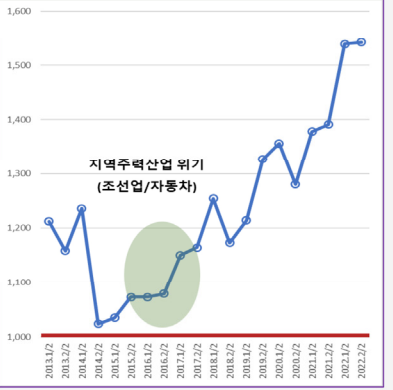


기업 입지 패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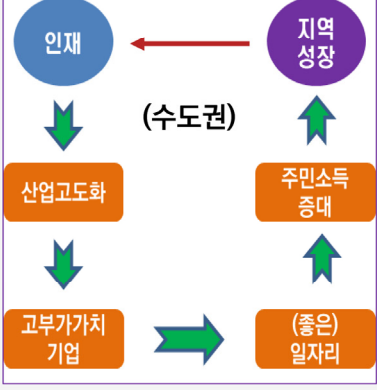
(과거)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
(최근)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을 부른다”

(좋은 일자리)

고급인력(대졸 이상) 분포(수도권/비수도권)



인재와 지역성장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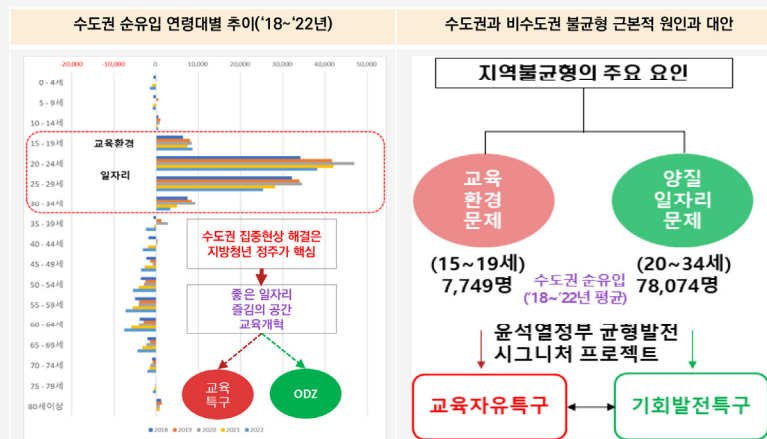


II. 균형발전 구조적 문제와 기회발전특구

KIET 산업연구원

4 ODZ는 지역균형발전의 Trigger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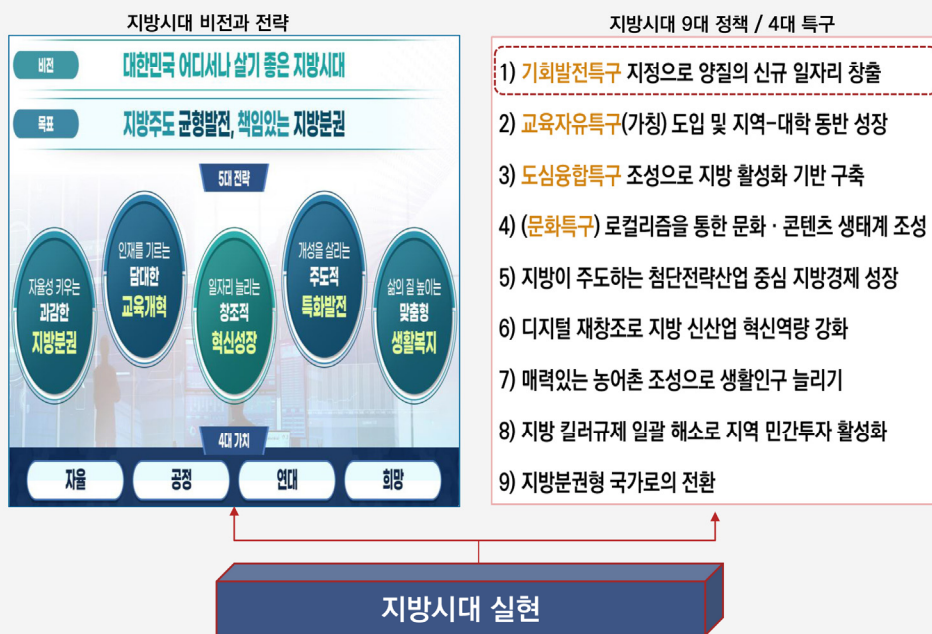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는 **청년의 지방 정주**
“교육·양질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
ODZ는 지방시대 실현의 Trigger 역할



III.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추진동향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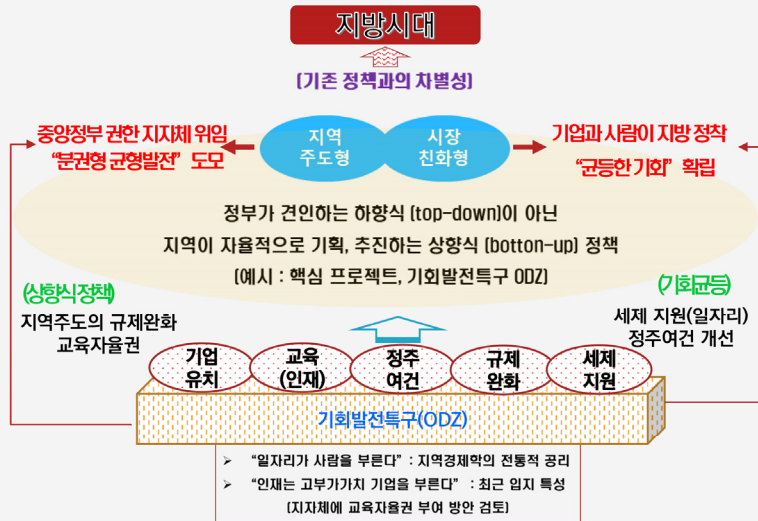
1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4대 특구·9대 정책



III.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추진동향

2 ODZ는 지방시대 실현의 마중물 역할

- ▶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주도성** 확대
- ▶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오게 만듦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시장친화형** 정책



III.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추진동향

3 법적 근거 및 지정절차

- ▶ (추진배경)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제정, 규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 지원을 통한 지방 주도의 투자 활성화 필요

- (상향식 제도) 투자 주체인 ‘기업과 ‘지방정부’ 주도로 지방투자 정책을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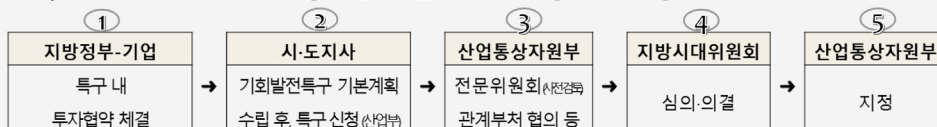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지정 근거 포함

- 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시행령안 제20조~22조(지정, 변경, 해제)
- 특구 관련 상세내용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포함

구자근 의원실에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제정 외 ①지방세특례제한법, ②법인세법,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소득세법, ⑤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발의 (23.5.9)

- ▶ (지정절차) 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III.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추진동향

KIET 산업연구원

4 대상 입지 및 지정요건

➢ (입지 선정) 지자체가 기업과 협의하여 특구 입지 결정

- 신규입지 또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旣 조성된 계획입지 모두 가능

➢ (면적 상한) 광역시 150만평, 광역도 200만평

-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 지정** 가능(개수 제한 없음)
- **연접형·분할형** 등 특구 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수 시·군·구(지역)**에 걸쳐거나 **다수 시·도에** 걸친 형태도 가능(다만, 각 시·도의 면적 상한 내에서 설정)
- **면적상한을 초과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III.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추진동향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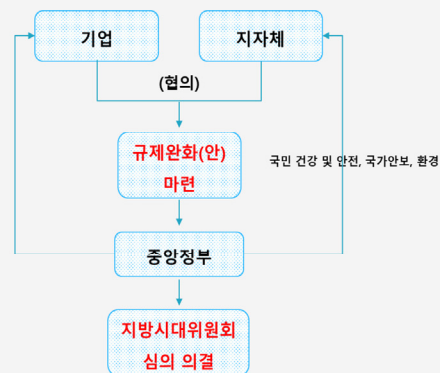
5 ODZ 지원내용 (1/2) : 규제특례 (안)

지방권한강화

- 지방정부가 기업과 협의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규제특례 요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규제특례 승인 (**입법권 침해 문제**)
- ✓ 단, 국민 건강 및 안전, 국가안보, 환경 등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외

규제3중특례

- (규제 신속 확인) 규제 여부 소관부처 문의 → 30일 이내 회신, 미 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실증 특례) 제품 안전성 검증이 필요 → 기존 규제 미적용, 일정 조건(지역, 기간 등)하에 테스트 허용
- (임시 허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고(최대 4년), 허가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 ✓ 많은 지역에서 첨단(신)산업을 대상 산업
- ✓ 신산업은 세계 인센티브보다 규제완화에 큰 관심
- ✓ 규제특례가 특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좌우

III. 기회발전특구 개요 및 추진동향



6 ODZ 지원내용 (2/2) : 세제 지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제 혜택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 완화**
-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

재정지원 확대

- ✓균특회계 자율계정 확대 → 특구 인프라 확충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 ✓(現) 투자금액의 3~50% 지원 → (改)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확대**

개발부담금

-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

금융지원

- ✓ODZ 펀드 조성 &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 추진, 일정기간 이상 투자 →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

정주여건 개선

-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으로 특구내 정주여건 개선
-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게 산업부장관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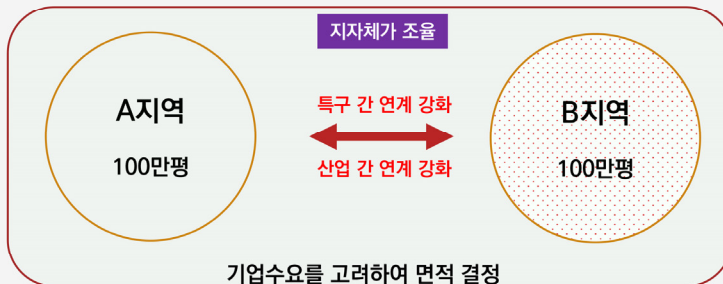
V. 지역의 대응방안



1 (입지 1/3) 기업-지자체가 특구 입지 협의

- 특구의 입지는 기업-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
- 다만, 면적상한제 (**200만평**)에 기초하여 분할 지정 대해 입주 앵커기업(동반입주 기업)-지자체가 협의하여 개수 결정 (**단, 규모/집적의 효과를 고려**)
- 기업수요가 충분히 있을 경우, **면적 확대 정부에 요청 가능**

ODZ 분할 특구 (예시)
(2000만평의 경우)



특구 지정 가능지역

- 국가산단
- 일반산단
- 경제자유구역
- 연구개발특구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 **신규개발지**
-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 기존 계획입지 또는 신규개발, 개별입지 모두 가능하므로 사전에 결정할 필요

V. 지역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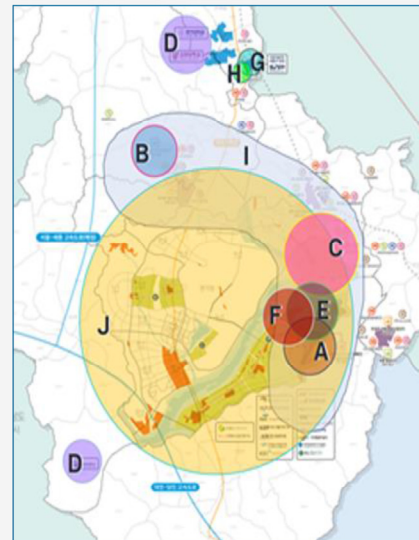
KIET 산업연구원

2 (입지 2/3)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설기업 입주 가능한 지구 우선 고려

➤ 후보지 우선순위 고려사항

- 기업입지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
- **(중요)** 조세 인센티브는 특구 내 기존기업 제외(**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설기업 적용**)
(특구 목적) 균형발전 및 지방투자 확대
- ✓ 현재 분양률이 높지만 부지가 부족한 지구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

복수 입지 후보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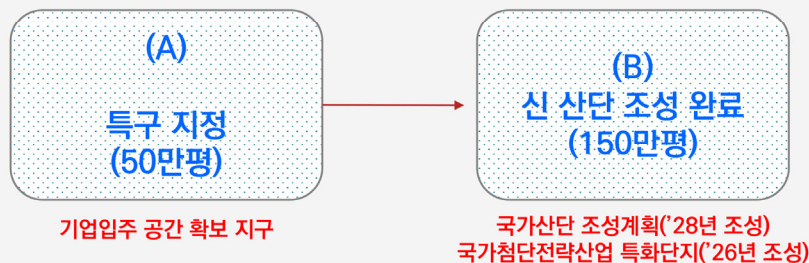


V. 지역의 대응방안

KIET 산업연구원

3 (입지 3/3) 특구 지정 후 새로운 공간 활용 가능 여부

- (A)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받았으나, 3~5년 뒤 (B)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단지 등 지구가 조성될 경우를 고려하여 순차적 특구 신청을 고려



- 기회발전특구 설계 시, 새로운 거점조성을 예상하여 순차적 특구 지정 신청을 고려
✓ 처음 신청 시 50만평 등 최소화, 산업(특화단지) 조성 완료 후 150만평 등으로 분할

V. 지역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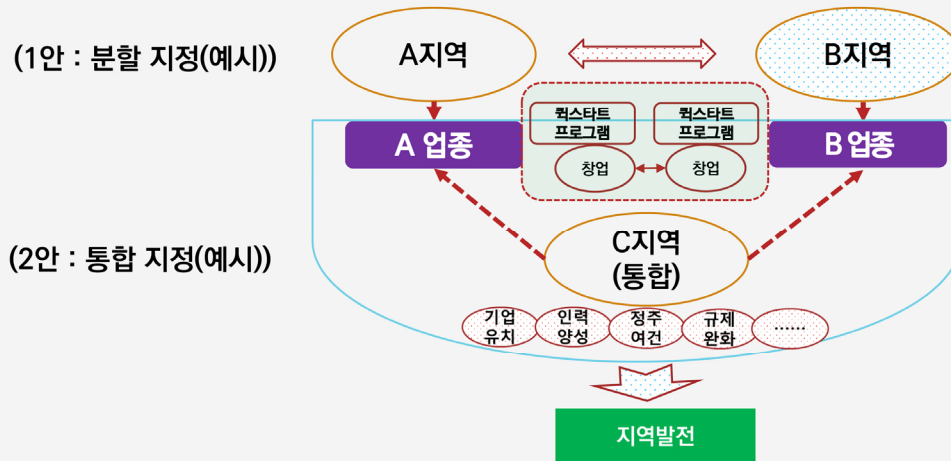
KIET 산업연구원

4 (업종 1/2) 특구 내 대상업종

➤ 투자 업종 제한은 없으며, 기업-지자체가 협의, 결정하는 구조

- 다만, 네거티브 업종(예 :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
- 산업별 및 산업 간 **창업활동과 퀵 스타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

(1안 : 분할 지정(예시))



V. 지역의 대응방안

KIET 산업연구원

5 (업종 2/2) 대상업종 선정

➤ 그간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 을 우선적 고려
(가이드라인 참조)

➤ 타 지역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 심의 시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복성 고려
- (사례) 세종시의 경우는 사이버보안 산업을 대상

➤ **대상업종과 입지 공간 간 정합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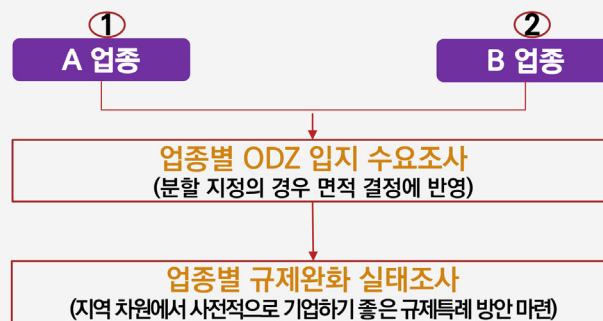
- (사례) 바이오산업의 경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연계

V. 지역의 대응방안

KIET 산업연구원

6 기업 수요조사 및 규제완화 실태조사

-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요기업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하는 점
- 신산업 관련 기업일수록 규제완화 요구가 많으므로 사전적으로 기업의 요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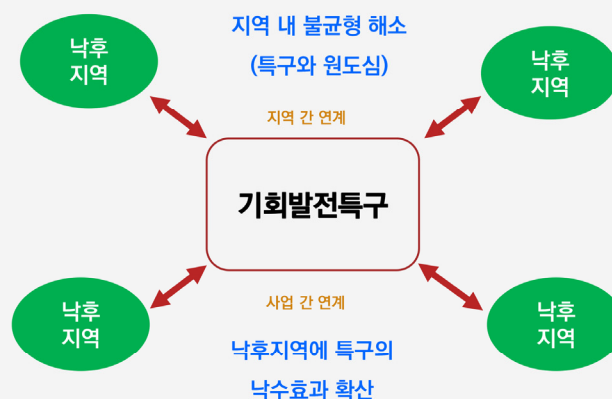


V. 지역의 대응방안

KIET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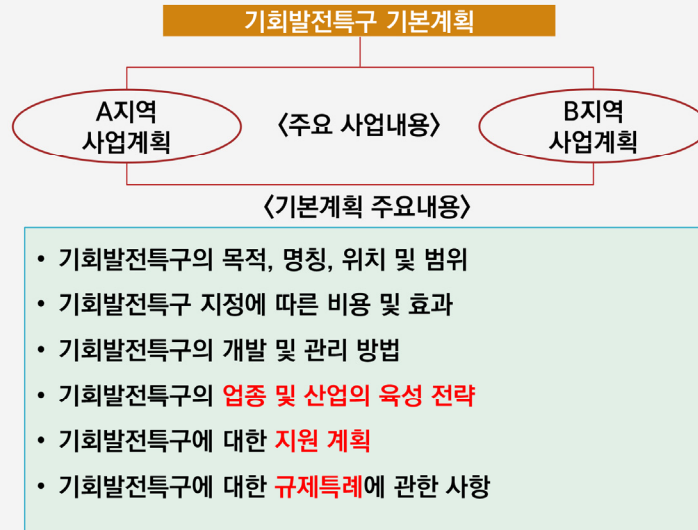
7 특구와 낙후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낙수효과 창출

-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구 인근의 낙후지역과의 지역 간 및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낙수효과 창출 방안 모색** 요구



V. 지역의 대응방안

8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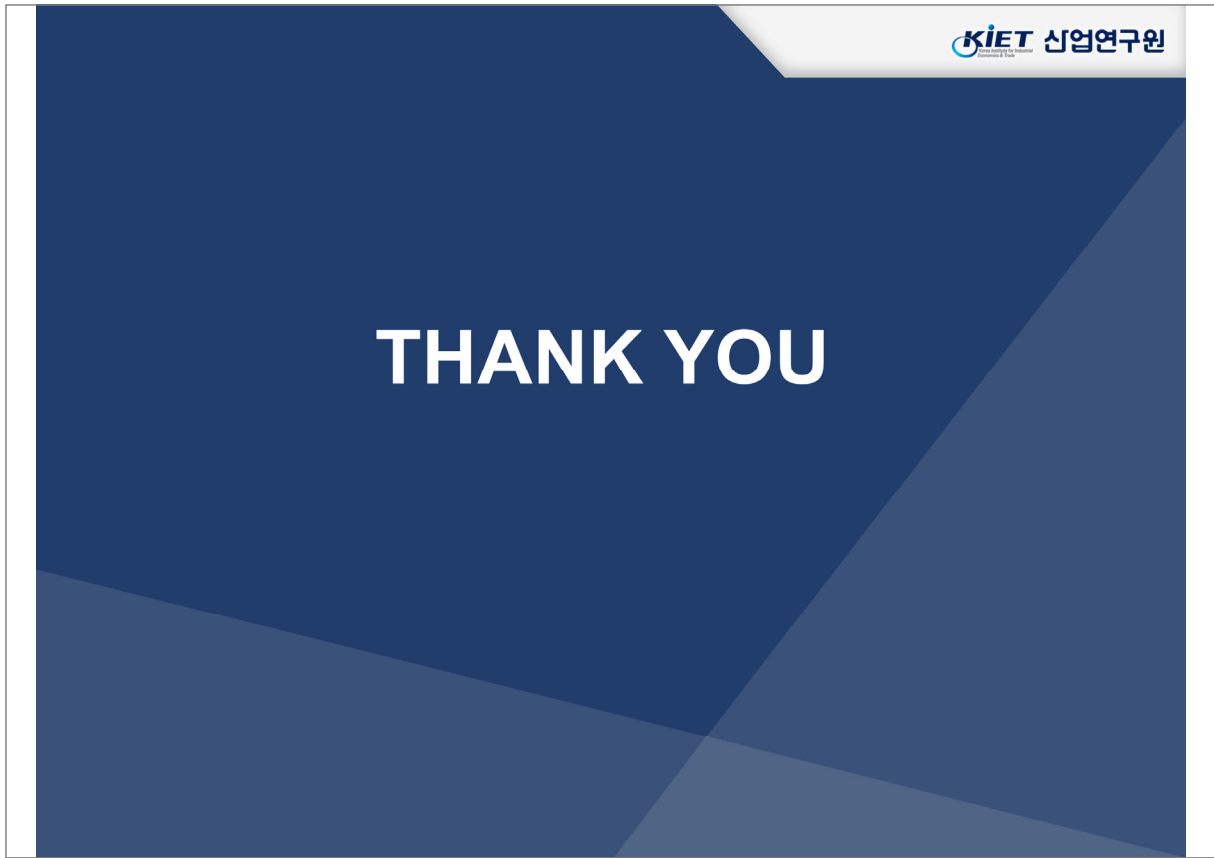


V. 지역의 대응방안

9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 투자계획 및 집적 가능성

(특구 지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

- ✓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앵커기업 투자계획
- ✓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 교육, 주거, 문화, 복지/의 인프라 조성 계획
- ✓ 특구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 특구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 고용창출 및 생산액 등
- ✓ 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 ✓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등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포럼



발표 3

기회발전특구 :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활성화 포럼(2023. 11. 1.)

기회발전특구 :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2023. 11. 1.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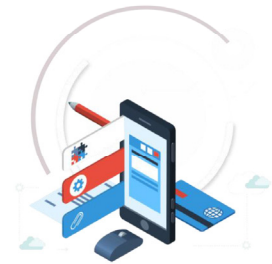


Contents

- I. 서론
- II.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 제도·지식자본을 중심으로
- III. 지역혁신체계 상·하부구조 분석 : 산학연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 V. 결론 : 특구발전을 위한 제언



I. 서론



I.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및 목적 ① 新산학협력 동력 발굴 필요

- 첨단산업 기술에 기초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위기 극복 등 지역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 혁신생태계 고도화와 지역혁신체계 개선 방안 제안

연구 배경 및 목적 ②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혁신생태계 취약

- 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역 주도형 지역혁신체계 방향성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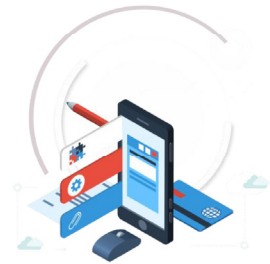
연구 배경 및 목적 ③ 공간경쟁력 재구성을 통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역량 강화 필요

-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산업-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의 협력 방안 발굴

연구 배경 및 목적 ④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특구 사업들에 대한 경험에 기초한 검토

-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캠퍼스 혁신파크,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등 다양한 특구사업 기획, 평가, 실행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여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

Ⅱ.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제도·지식자본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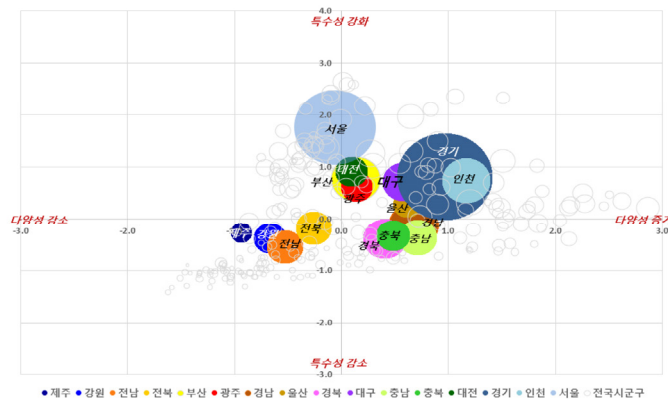


Ⅱ.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 지식·자본 자원을 중심으로

1. 산업역량 혁신 역량 격차

첨단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관한 지역별 혁신 역량 격차는 지식과 제도 자본 중심의 지역산업의 다양성 및 특수성 역량 격차로 표출

- (지역의 산업 특수성) 특정 지역에서 지식과 제도자본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요소
- (지역의 산업 다양성) 특정 지역에서 지식과 제도자본의 증가는 혁신지원 산업의 특수성 외에도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수 있는 기존 지식기반과 이를 새로운 지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성을 의미



<광역시도 차원에서 산업다양성과 산업특수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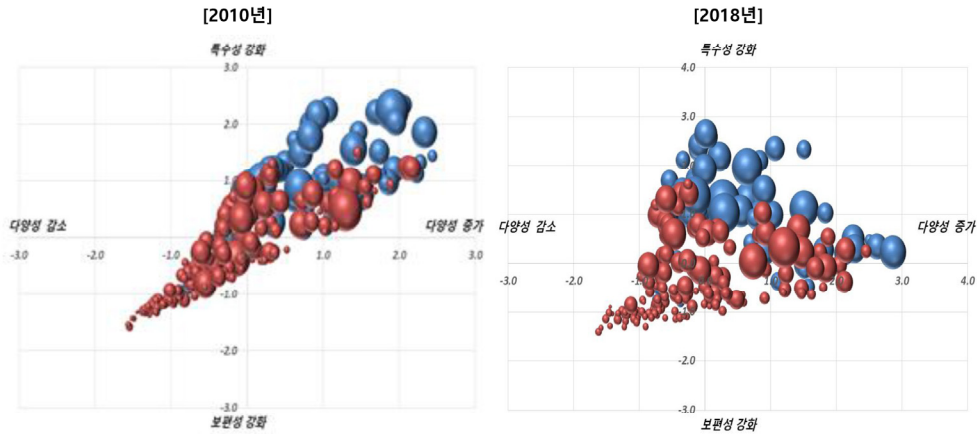
*자료: 표정에 제시된 자료는 정성훈, 2023, 지역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선 방안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산업연구원 이상호 공동작성)에서 일부 발췌

II.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 지식·자본 자본을 중심으로

1. 산업역량 혁신 역량 격차

(분석결과 ①) 2010년과 2018년 산업다양성과 산업특수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식자본과 제도자본의 내생적인 발달에 있어서 격차 확인

(분석결과 ②)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2010년보다 2018년에 산업특수성이 크게 저하 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특수성이 낮아 지식창출의 유인이 낮은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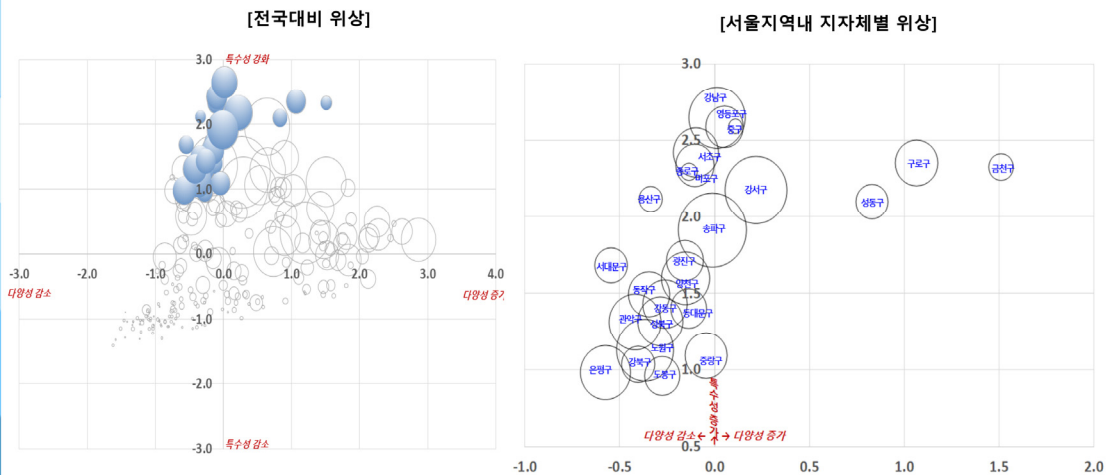
<시군구 지역의 산업다양성과 산업특수성 현황>

*주: 1) 빨간색 원은 비수도권 지역, 파란색 원은 수도권 지역을 의미
2) 원의 규모는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냄

II.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 지식·자본 자본을 중심으로

2. 주요 사례 : 서울시

(분석결과) 서울지역은 산업특수성이 높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투입유인이 큰 지역이나 산업다양성이 비교적 낮아 자체적인 새로운 혁신 및 기술발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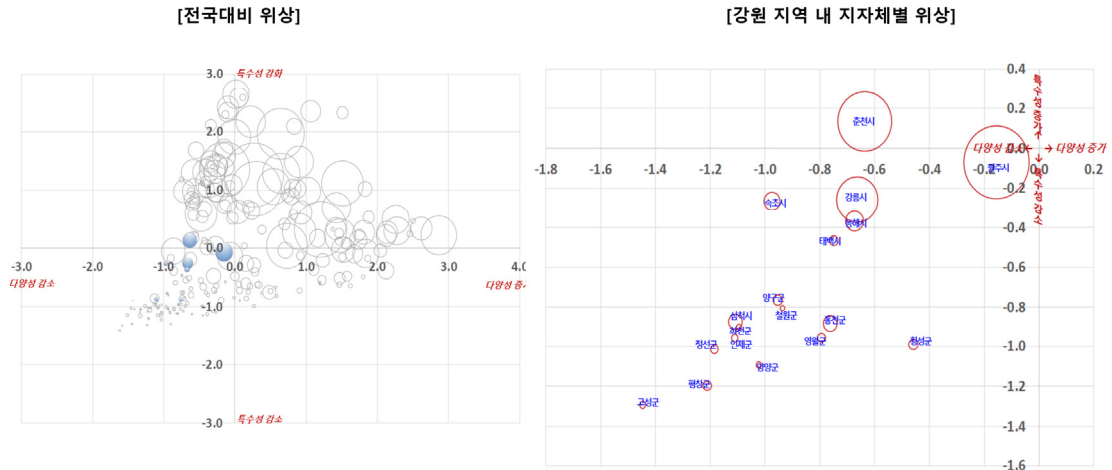
<산업다양성과 산업특수성으로 본 서울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주: 원의 크기는 2018년 주민등록인구 규모

II.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 지식·자본 자본을 중심으로

2. 주요 사례 : 강원도

(분석결과) 강원도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대부분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분석,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춘천시와 원주시의 산업특수성은 전국 평균 수준이며, 산업다양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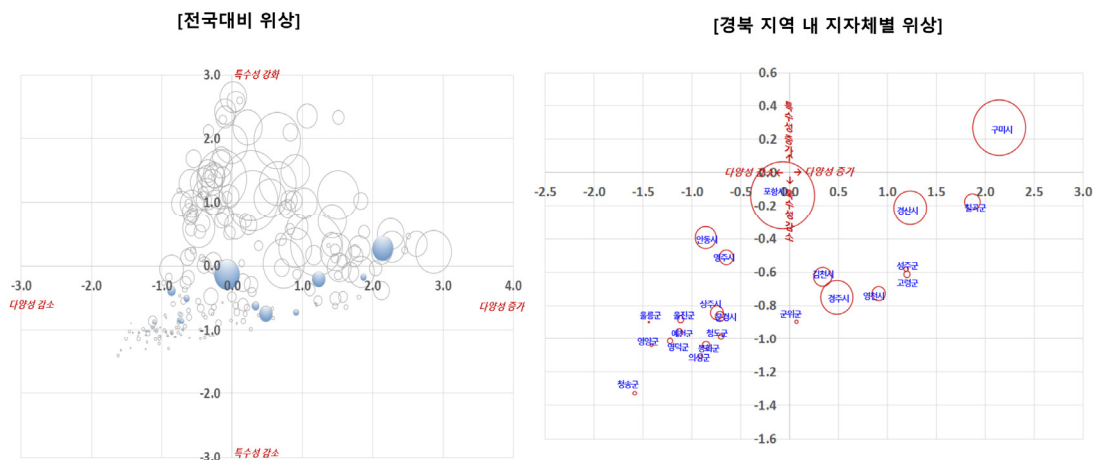
*주: 원의 크기는 2018년 주민등록인구 규모

9

II.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 지식·자본 자본을 중심으로

2. 주요 사례 : 경상북도

(분석결과) 산업다양성과 산업특수성으로 본 경북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부분의 지역(구미시 제외)이 산업특수성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나는 등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지식의 습득, 혁신 축적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



*주: 원의 크기는 2018년 주민등록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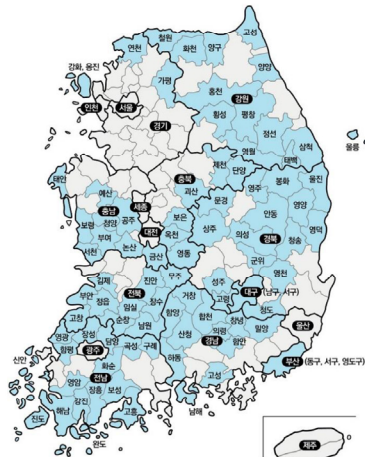
10

II.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 지식·자본 자본을 중심으로

4. 지역소멸시대의 인구감소지역 현황 분석

1970년 이후 지난 50년간 낙후지역으로 존속한 지역들이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약 89개에 달하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역혁신 방안도 미흡

- 2023년 현재 지역소멸 위기 대상 지역은 약 89개
 - 소멸위기 대상 지역들의 중장기 발전은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큼
 - 정책적 투입 방향 설정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상 지역>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곡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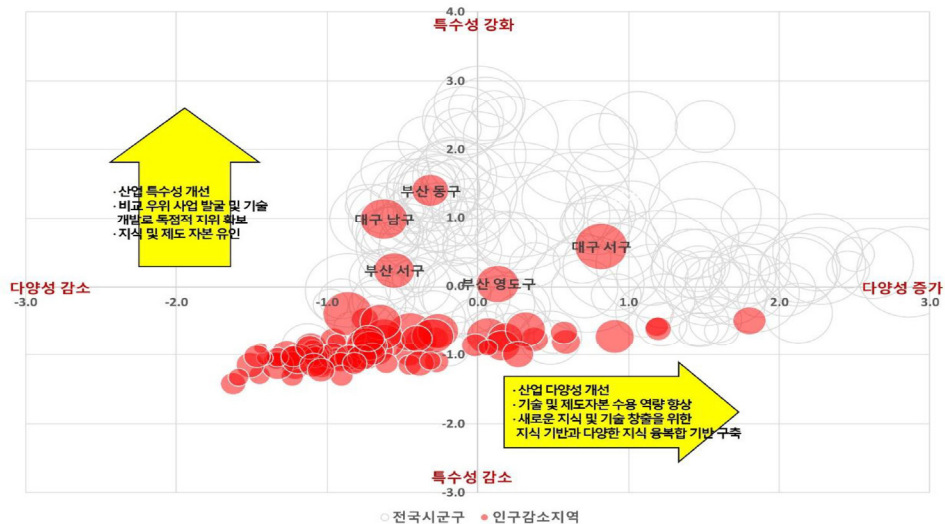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11

II. 지역별 산업혁신 역량 분석 : 지식·자본 자본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중 84개 지역(94.4%)은 산업 특수성이 낮아 독점적이윤 창출 가능성이 낮으며, 지식 및 제도 자본의 유인이 충분하지 않아 개별 지자체 자체 역량만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려움 존재

- 지역 과학기술 역량 잠재력 지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분포를 매핑한 결과 전체 89개 지역 중 71개 지역(79.8%)이 III사분면, 13개 지역(14.6%)이 IV사분면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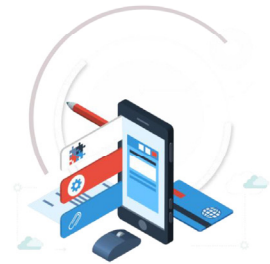


<산업다양성과 산업특수성으로 본 인구감소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자료: 정성훈, 2023, 지역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선방안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춘천비이오산업진흥원 김경환 공동 작성)

12

Ⅲ. 지역혁신체계 상·하부구조 분석 :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1.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사례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 중점 고려 사항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자료.

- **(제3장 보완 사항)** 제2조에서 지역의 정의(광역시도 등 단위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의 범위 등)를 명확히 하고, 제9조~제15조에 이르는 사업들의 지역적 범위 설정 필요
 - 제17조와 제18조는 과학기술전담기관의 기능으로 정책연구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전담 기관의 추진체계(지역주도형,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계형, 초광역 단위의 추진체계 구축 등) 제시 필요
- **(제4장 보완 사항)** 산·학·연 각 주체의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지역 기업의 지식 및 제도자본 창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21조의 지역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 마련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광역시도별 네트워크 분석 지표 결과 비교 <전국 광역시도 공동 연구 네트워크 주요 지표>

- **(평균기준 연결중심성 높음)**
지역 내부에서 산학연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 **(평균기준 매개중심성 높음)**
업종·기술, 하위지역으로 구분된 다양한 그룹 간의 네트워크가 분절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연결됨을 의미
- **(평균기준 관계지속성 높음)**
지역 내 동일 파트너 간의 협력관계가 평균적으로 지속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
- **(평균기준 지역내부비중 높음)**
광역시도 내에서 발생한 특허 공동출원 실적 중에서 지역 내부기관 간의 공동연구로 추진된 경우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

지역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 비중(%)
서울특별시	4.95	31.34	6.86	39.8
부산광역시	3.96	17.92	1.96	38.5
대구광역시	4.25	13.16	1.93	35.6
인천광역시	3.08	7.18	2.15	19.1
광주광역시	3.52	4.21	1.80	34.3
대전광역시	4.63	15.53	2.98	28.2
울산광역시	3.71	8.19	2.48	23.0
세종특별자치시	2.37	0.67	1.95	7.6
경기도	3.67	24.32	2.52	39.1
강원도	3.98	17.43	2.21	40.7
충청북도	4.01	15.97	2.08	33.7
충청남도	3.55	7.72	2.20	23.6
전라북도	5.44	17.26	2.00	58.1
전라남도	3.92	16.74	1.99	41.2
경상북도	4.46	25.23	7.31	34.6
경상남도	3.46	9.09	2.00	30.9
제주도	4.30	11.39	1.91	47.9
전국 평균	4.17	21.22	3.12	37.6

* 주 : 빨간색은 각 지표별로 전국 평균 이상, 파란색은 각 지표별로 전국 평균 이하를 의미

15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광역시도별 네트워크 유형 구분

- (클러스터형) 서울, 경북, 대전, 경기도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의 지표 전반이 우수하며 다양한 산학연 주체들이 지속성 있게 협력관계를 구축

<클러스터형 광역시도 네트워크 분석 종합 결과>

시도명	기업생태계 기반 네트워크구조	지역 내부 비중(%)	지표결과 및 핵심 주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비중
서울	클러스터형	34.6	+	+	+	+
			대학	대학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경북	클러스터형	38.5	+	+	+	-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전	클러스터형	28.2	+	-	-	-
			대학	대학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경기	클러스터형	39.1	-	+	-	+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중견기업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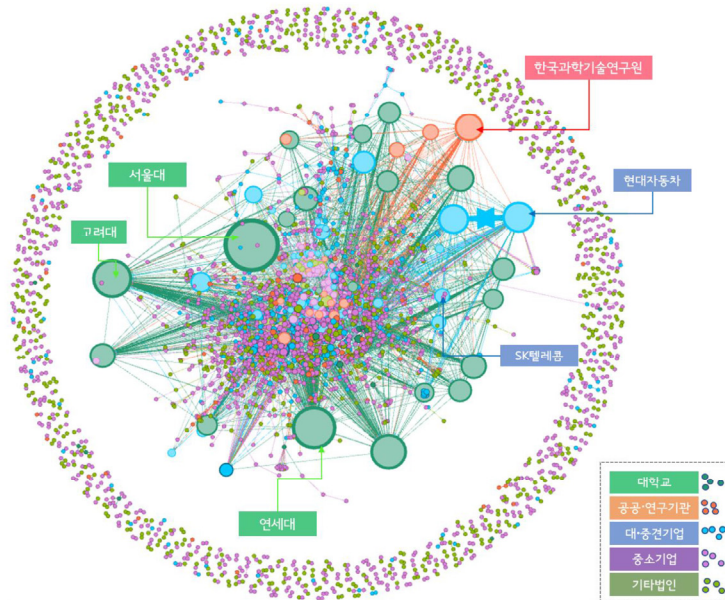
* 주 : 지표결과 및 핵심 주체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비중은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로 표시

16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서울(클러스터형)

- (클러스터형) 서울시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시각화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대학들의 중심적인 위상이 관찰되긴 하지만 일부 기관이 주도하지 않은 다양한 산학연 주체들의 참여 활성화



17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광역시도별 네트워크 유형 구분

- (내부지향형) 전북, 전남, 강원, 제주는 지역 내부주체 간 협력관계 비중이 높고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결집 발달

<내부지향형 광역시도 네트워크 분석 종합 결과>

시도명	기업생태계 기반 네트워크구조	지역 내부 비중(%)	지표결과 및 핵심 주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비중
전북	내부지향형	58.1	+	-	-	+
			대학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학
전남	내부지향형	41.2	-	-	-	+
			대학	대학	대·중견기업	대학
강원	내부지향형	40.7	-	-	-	+
			대학	대학	대·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제주	내부지향형	47.9	+	-	-	+
			대학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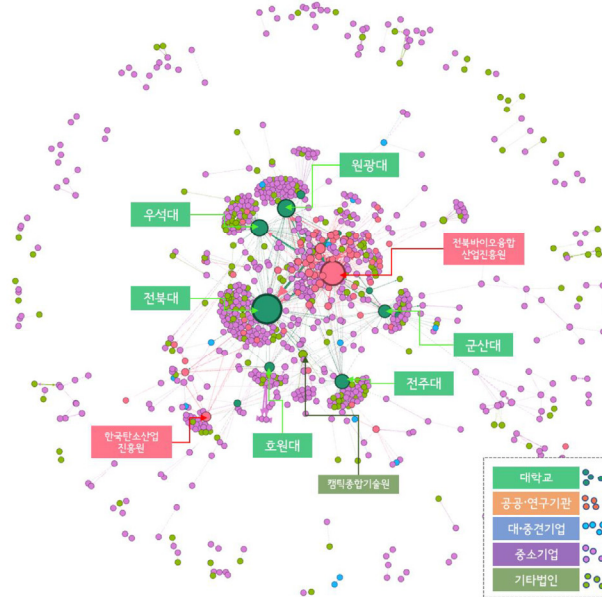
*주 : 지표결과 및 핵심 주체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비중은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로 표시

18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전북(내부지향형)

- (내부지향형) 전라북도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는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및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지역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참여 비중이 높아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밀도 높은 클러스터의 구조 보유



19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광역시도별 네트워크 유형 구분

- (외부의존형) 인천, 울산, 충남, 경남, 세종은 지역 내에서 뚜렷한 중심점이 발달하지 못하고 협력관계의 외부의존도가 매우 높음

<외부의존형 광역시도 네트워크 분석 종합 결과>

시도명	기업생태계 기반 네트워크구조	지역 내부 비중(%)	지표결과 및 핵심 주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비중
인천	외부의존형	19.1	-	-	-	-
			대학	인천	대·중견기업	대학
울산	외부의존형	23.0	-	-	-	-
			대학	대학	대학	중소기업
충남	외부의존형	23.6	-	-	-	-
			대학	대학	대·중견기업	대학
경남	외부의존형	30.9	-	-	-	-
			대학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학
세종	외부의존형	7.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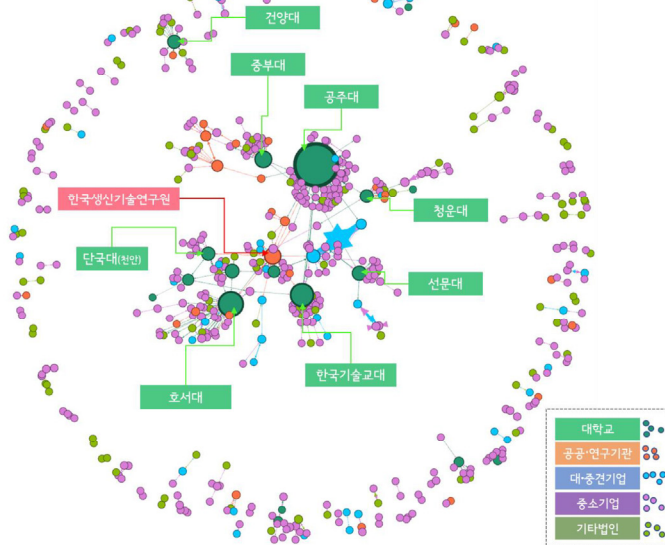
*주 : 지표결과 및 핵심 주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비중은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로 표시

20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 충남(외부의존형)

- (외부의존형) 충남은 공주대, 호서대 등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지역 내 뚜렷한 거점대학이나 앵커 기업의 역할이 부재하여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76.4%가 지역 외부주체와 연결되어 매우 높은 외부 의존도 보유



21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광역시도별 네트워크 유형 구분

- (절충형) 대구, 충북, 부산, 광주 등은 네트워크 분석지표에서 평균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뚜렷한 유형화 구분이 어려움

<절충형 광역시도 네트워크 분석 종합 결과>

시도명	기업생태계 기반 네트워크구조	지역 내부 비중(%)	지표결과 및 핵심 주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비중
대구	절충형	35.6	+	-	-	-
			대학	대학	대·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충북	절충형	33.7	-	-	-	-
			대학	대학	대·중견기업	대학
부산	절충형	38.5	-	-	-	+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광주	절충형	34.3	-	-	-	-
			대학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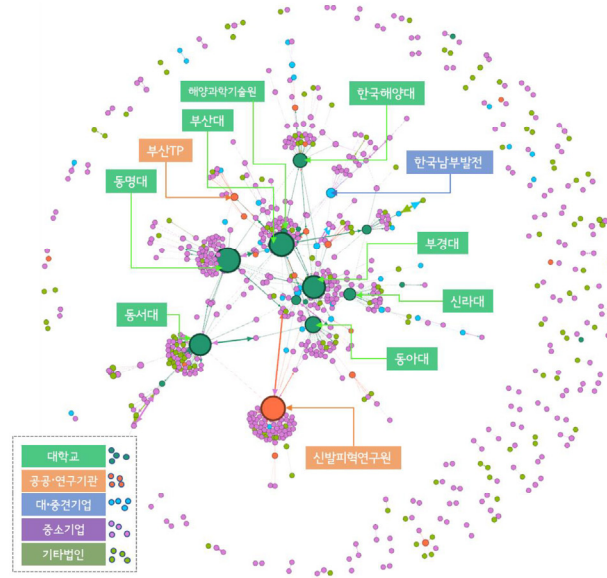
*주 : 지표결과 및 핵심 주체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관계지속성, 지역내부비중은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로 표시

22

Ⅲ 지역혁신체계의 상하부구조 분석: 산학연 협력과 기업혁신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유형화: 부산(절충형)

- (절충형) 부산광역시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는 뚜렷하게 대학 중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산 소재 대·중견 기업은 지역 외부기업과, 지역 내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높은 협력 구조 형성



23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1.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5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1-1.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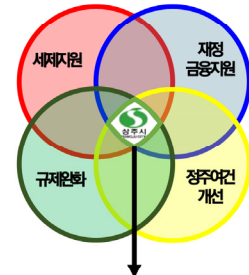
- ①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인 '규제특례'를 활용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등 마련
- ② 앵커기업 및 입주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활용 운영 방안 제시

- '분권형' 기회발전특구에 적합한 '지역형'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설계 및 입주기업 유치 인센티브 패키지 구축

<p>01 (규제특례)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토지확보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수요에 기반한 상주형 규제특례 패키지 개발 • 기회발전특구 입주계획이 확정된 앵커기업의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하여 토지 확보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규제특례 설계 	<p>02 (기업유치)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패키지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지역스몰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상주시 기회발전특구 기업유치 패키지 지원 방안 도출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국토교통부), 공공인대형 자식산업센터 건립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p>03 (지역상생)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여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등 연계(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 주택지원사업 등) • (교육지원) 상주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와 자녀를 위한 상주형 지역교육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	---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지원현황〉

구분	주요 내용
① 세제지원	·(양도차익 법인세)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 까지 과세 이연 ·(법인세, 취득세) 특구내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감면(6년 100%, 2년 50%)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개발부담금) 특구내 신규 취득 사업용 자산 재산세 감면, 특구내 입지 조성시 개발부담금 감면
② 재정금융 지원	·(규제특례) 자율계정 확대를 통한 특구 인프라 확충 ·(기회발전특구펀드) 민간자본 재원으로 특구 입주기업 및 인프라 투자, 장기투자시(10년)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P 가산 ·(저리금융)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③ 규제완화	·(규제혁신3중세트)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제도) 지자체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특례를 직접 설계 신청
④ 정주여건 개선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특구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근로자주택임대세)농어촌주택 임대세 특례 적용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설립 지원



지역형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설계 및 입주기업 유치 인센티브 패키지 구축 26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1-2. 기회발전특구사업 기획 예시 : 대구경북 ODZ 도입 사례

① 기회발전특구 선정방안

지역	지역 쇠퇴 및 소멸위기 지역 대상, 지역 특화산업이 있거나 향후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읍면동) 단위 지역특화 또는 혁신산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선정,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 •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산업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 기기업 투자 또는 이전 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 • 기 조성된 계획입지(국가지방산업단지, FEZ, 개별입지도 모두 가능)
투자 업종	기존 제조업 및 특화산업, 신산업 중심으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특화산업 또는 신 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은 특례를 적용하여 성장 기반 추구
인력	특구 맞춤형 인력유치, 기업 현장심화학습,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취업을 위해 지역적으로 유입된 인력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부동산 세제혜택(취득세 등 감면) 등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보조금 지급 • 특구 지역 소재 특성화 고교 또는 대학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 고졸 대상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능력을 확보 할 기회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료 : 설홍수, 2022, 대구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모델(안)

27

V. 다양한 특구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한 시사점

1-2. 기회발전특구사업 기획 예시 : 대구경북 ODZ 도입 사례

② 후보지역 조사 및 민간투자상품 개발

전담조직 마련 및 기회발전특구 후보지역 기초조사	ODZ 관련 직간접 투자 유치가 가능한 민거나 투자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지역 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기회발전특구 선정 • 국가 기회발전특구 정책 및 지정 논리에 부합하는 후보지역 선정 및 논리적 근거, 차별적 지원방안 마련 • 대구경북 차원에서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특구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권역단위 기초 데이터 구축 • 주후 기회발전특구 투자 펀드 유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전담조직 구성 및 투자유치 플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차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투자 상품 개발 • 대구경북 내 민간의 투자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공공주택, 민간자원 연계 고부가가치화 등 유형화 된 투자사업 선제 발굴 • 미국 QOZ 펀드 투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자원활용과 연계한 수익성이 높은 투자 상품 모델 개발 및 홍보

자료 : 설홍수, 2022, 대구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모델(안)

28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1-2. 기회발전특구사업 기획 예시 : 대구경북 ODZ 도입 사례

③ 후보지별 사업구상 및 기존 특구 연계

기회발전특구 규제완화 +
지역내 다양한 혁신사업 연계

- 타 지역 기회발전특구와 달리,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자체 유인책 및 차별화 방안 마련
- 실질적 규제완화 혜택을 파악하여 대구경북 규제 특례에 반영, 선제적 법적, 제도적 도입 방안 마련
- 타 지역 기회발전특구와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환경(그린벨트), 산림, 산업, 군사 등 혁신적 규제완화
- 지역내 도입 가능한 다양한 특례 및 권한 이양 방안을 발굴하여 요청

기존 특구영 조정, 통합, 전환 방안
마련 및 요청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분권혁신특구, 신산업, 혁신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새로운 특구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 기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다양한 특구의 운영 현황 파악 → 대구경북 자원의 연계 협력 방안 마련

자료 : 설홍수, 2022, 대구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모델(안)

29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1-2. 기회발전특구사업 기획 예시 : 대구경북 ODZ 도입 사례

④ 개발사업 방식 선정

구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의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산업단지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오·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부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사업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획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단의 택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사업목적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를 조성	양질의 기반시설을 구비한 산업부지 공급 및 산업집단화 도모	특별법의 지위로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신도시 개발에 적용	주거지정비 목적(재개발, 재건축 등)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정비기본계획
사업방식	수용·환지, 혼용방식 중 선택	수용, 환지	수용방식	관리저분
시행	공공, 민간, 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공공, 민간, 관공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공공사업자만 시행 가능(민간 공동시행 허용)	민간(중립) 위주의 시행
도입가능사실	「도시개발법」 제11조(별표) 토지용도분류,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3조(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작성)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 4조(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및 공공시설)	
규제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100㎡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은 부지면적의 12% 이상의 공원 녹지 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7조(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제 2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100㎡ 이상 300㎡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면적 75% 이상 ~10% 미만의 공원 녹지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100㎡ 이상 330㎡ 미만인 개발계획의 경우 부지면적 28% 이상의 공원 녹지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5만㎡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부지면적 5% 이상의 공원 녹지 확보
검토	단지 및 시가지 조성은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다양한 시도 도입이 가능하며 수렴협력사업의 도입 시설의 수용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집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의 요구 비율 및 녹지 확보 비율 등 수렴협력사업의 도입 시설 수용은 가능하나 제약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주택건설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회 수렴협력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주거지정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렴협력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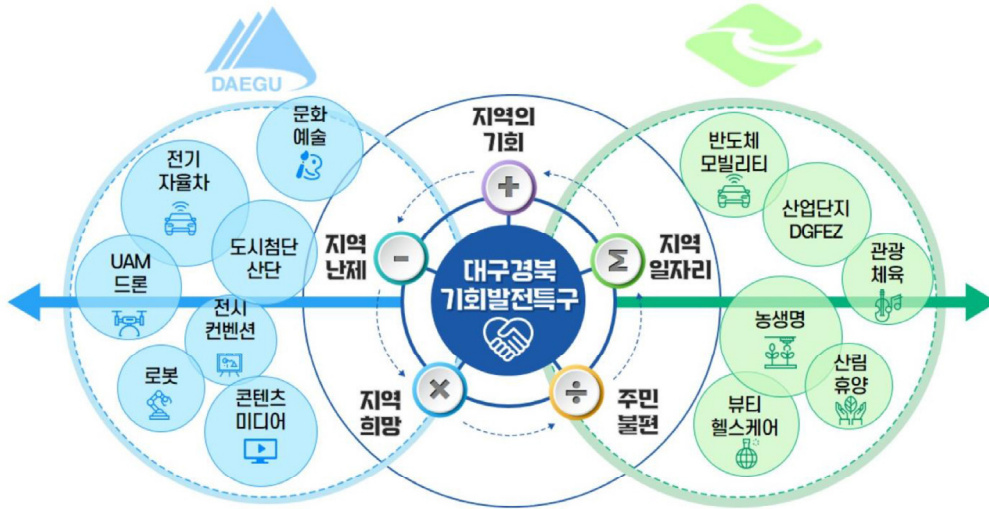
자료 : 설홍수, 2022, 대구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모델(안)

30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1-2. 기회발전특구사업 기획 예시 : 대구경북 ODZ 도입 사례

⑤ 대구경북지역 기회발전특구 도입 컨셉



자료 : 설홍수, 2022, 대구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모델(안)

31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1-2. 기회발전특구사업 기획 예시 : 대구경북 ODZ 도입 사례

⑥ 대구경북지역 ODZ 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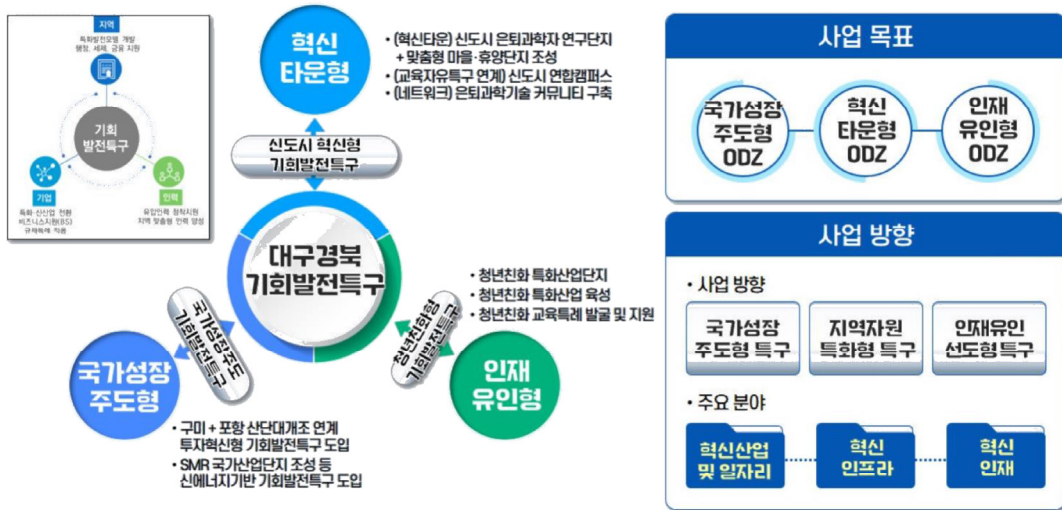
자료 : 설홍수, 2022, 대구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모델(안)

32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3-2. 기회발전특구사업 기획 예시 : 대구경북 ODZ 도입 사례

⑦ 대구경북지역 기회발전특구 3대 유형



자료 : 설홍수, 2022, 대구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모델(안)

33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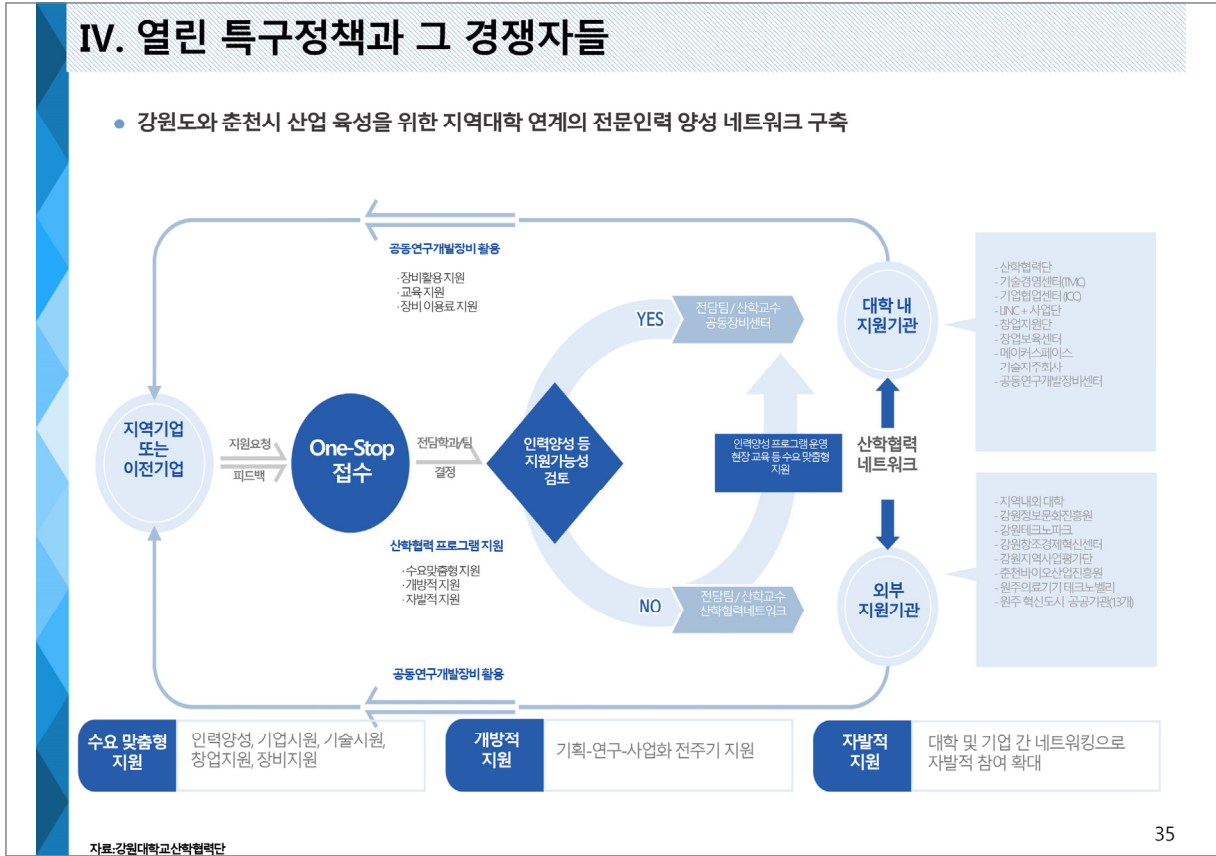
2. 지역산학협력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KNU 캠퍼스 혁신파크 사례)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와 산학협력단지 조감도



자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4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통한 신산업공간 지원 : 경상북도 상주시 사례

3-1. 선도기업(군) : SK(주)머티리얼즈(SK스페셜티,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투자 개요

- 위치 : 청리면 마곡리 1236번지 일원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
- 면적 : 부지 373,848㎡ (113,089평) / 건축 2.5만평
- 조성계획 : ① 실리콘 음극재 공장 18동 (36,000T, 건축규모미정) / ② 실란공장 3동 (19,200T, 25,050평) / ③ 질소공장 1동 (생산규모미정 / 3,742평)
- 토지이용 : 일반공업지역 [업종분류코드 C20 화학업종 및 화학제품]
- 투자금액 : 1.1조원 (SK스페셜티(SKST) 3,000억 /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8,000억)
- 고용인원 : 200명 (SK스페셜티(SKST) 90명 /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110명)
- 내용 : 배터리 소재 (실리콘 음극재) 생산 [업종코드 C20121, C20499]

자료 : 정성훈, 2023, 상주 이차전지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연구 용역, 경상북도 상주시.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3-1. 선도기업(군) : SK(주)머티리얼즈(SK스페셜티,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 (앵커기업의 상생협력 계획) SK(주)머티리얼즈는 상주청리산단 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위해 약 11만평의 부지를 확보
- Si계 음극재를 시작으로 상주시 및 상주시 기업들과 협업하여 배터리 소재 종합 클러스터 구축 예정



<SK(주)머티리얼즈의 상주 매입부지 현황>

<SK(주)머티리얼즈의 상주시 부지 활용 계획>

구분	부지 활용 계획	필요부지 (~2025년)
Si系 음극재	· 연간 2천톤 규모 지속 증설 예정 - Capa : '22년 2천톤 → '25년 10천톤	2만평
음극재용 SiH4	· Si系 음극재 증설 연계 SiH4 공장 신설 - Capa : '22년 4.85천톤 → '25년 13.2천톤	3만평
양극재	· 中 B社와의 JV 양극재 양산공장 신설 - Capa : '23년 20천톤	0.6만평
고성능 부재료	· 日 기술 Co.와의 JV CNT 도전재 공장 신설 - Capa : '23년 200톤 → '25년 400톤	0.2만평
총계		5.8만평

자료 : SK(주)머티리얼즈, 2021, SK(주)머티리얼즈 1st Analyst 간담회 발표자료

37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3-2.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추가 투자 계획 : (주)아바코

- (주)아바코는 약 16,930평 규모에 300억 원 을 투자하여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생산 기계 장비 공장을 신설
- 최신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생산량 증대, 품질 향상, 제품 라인업 확대에 주력
- 인허가 용역 및 토목, 건설사업 등 시행시 상주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인재 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

<(주)아바코 향후 투자 계획>

추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기계 제조 추가 투자 500억 예정(2023.08, MOU 추가 추진) - 1~2년 후 공장 착공 예정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
고용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고용인원 150명 이상 - 기숙사 건립보다 연립주택 임차해서 활용 예정(산업시설용지 67% 분양 완)

<(주)아바코 공장 입주 계획>

구분	세부내용
2023. 03 ~	· 산업단지 내 부지(6필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 · 부지평탄화작업은 2023.04월 중 완료 · 예상사업비 : 2억원(상수일반산업단지조성 예산 집행)
2023. 04	· (주)아바코 공장 착공
2023. 08	· (주)아바코 공장 준공



<(주)아바코 향후 투자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주)아바코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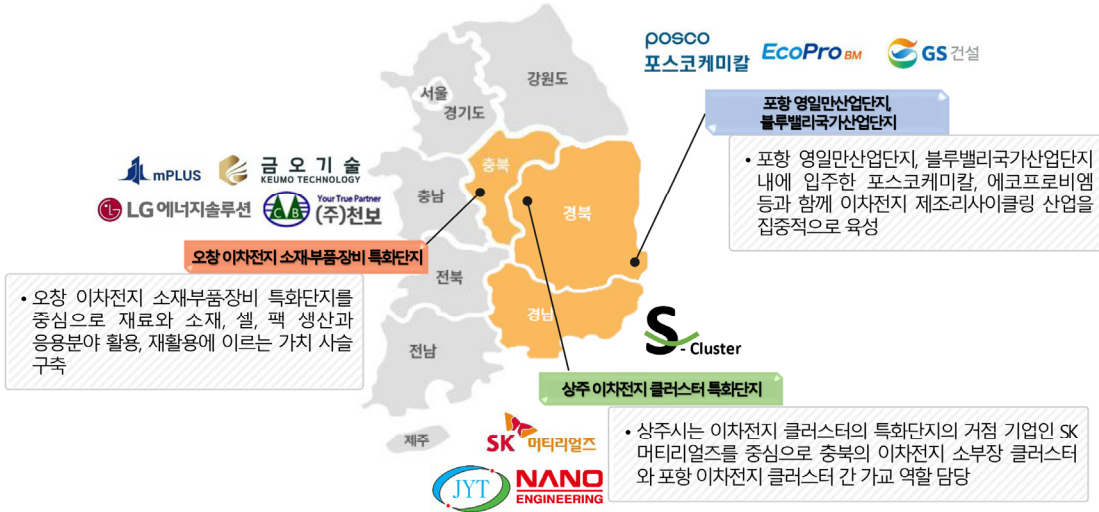
38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3-3. 他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

- 국가적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를 연계하여 국가 거점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국가 거점 이차전지 클러스터 연계방안(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북도)



39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3-4. 첨단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 공급 현황 및 육성 방안

“정부 계획에 준하는 상주시 K-배터리 전문인력 양성 예정”

핵심인력	- 전지설계, 소재, 고도분석, 장비 등 분야별 인력 양성 확대(기존 50명 → 150명 확대) - 사후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공정인력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내 유관전공학과에 학부 대상 이차전지 트랙 구축
현장인력	- 기술애로 해결 중심 재직자 교육 실시

“이차전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협약일시	- 2023. 02. 09.
협약기관	- 상주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상산전자고, 상주공고, SK머티리얼즈그룹포인
협약내용	- (市) 이차전지 산업 인재양성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사업 발굴 - (社)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 (學) 기업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공통) 각종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 등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로 이차전지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전공 트랙이나 특성화 학과 개설 및 운영 예정
-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전문기관의 핵심기술 석·박사 운영이 필요하며, 수요맞춤형 산학프로젝트 운영 및 핵심기술의 국산화 과정 개발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상주시 이차전지 인재 양성 업무 협약 체결>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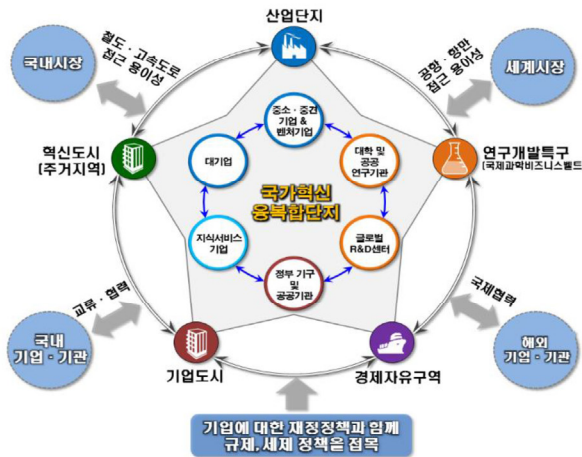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4. 지역혁신클러스터 : 국가융복합단지

4-1. 현황

추진 목적

신산업육성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성장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을 가진 지역 혁신거점 연계



<그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개념도

41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4. 지역혁신클러스터 : 국가융복합단지

4-2. 지원내용

지원 내용

시도별 신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R&D와 비R&D 재정지원사업 추진

- (R&D)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과 함께 연계산업 육성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
 - (사례) 미래차·항공(울산, 경북, 세종, 경남), 바이오·헬스(대구, 강원, 전북, 제주), 에너지산업(충남, 광주, 전남, 충북, ICT 융합(부산, 대전))

<표> 국가혁신클러스터 시도별 R&D 프로젝트('18~'20년)

시도	분야(대·중분류)	R&D 프로젝트	시도	분야(대·중분류)	R&D 프로젝트
울산	미래차	초소형전기차	충남	에너지 신산업	수소에너지
경북	항공	전기차부품	광주		에너지 신산업
세종		자동차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항공부품	민수항공기부품설계기술개발	충북		에너지 효율향상부품
대구	바이오 헬스	지능형의료기기	부산	ICT 융합	해양ICT융합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전		스마트안전산업
전북		스마트농생명			
제주		화장품 및 식품	개인맞춤형기능성화장품개발		

42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4. 지역혁신클러스터 : 국가융복합단지

4-3. 지원내용

지원 내용 시도별 신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R&D와 비R&D 재정지원사업 추진

- (비R&D) 융복합단지 기업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등 추진

<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정책

지원 정책	지원 내용
① 보조금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지역 으로 선정 - 부지매입액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24%까지 보조금 지원
② 규제 특례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적용 입주기업의 인·허가를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
③ 금융지원	입주기업 대상 특별 금융상품 출시 (IBK 기업은행) 정부 R&D 성공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 직접 저리용자 지원
④ 재정	혁신프로젝트 추진 및 생태계 조성 등 예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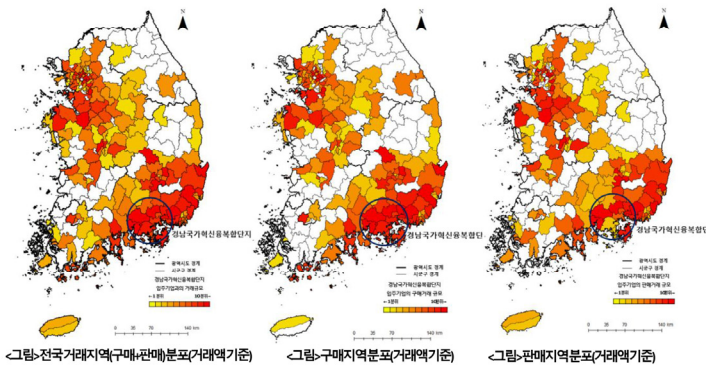
43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4. 지역혁신클러스터 : 국가융복합단지

4-4.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거래 구조 : 경남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거래 구조

- (경남) 지역 내 구매비율이 **경기도 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 유형**



<표> 경남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거래(구매·판매)지역분포(거래액기준)

지역	전체 거래 기업 수(개)	전국대비 총괄 거래기업 비율(%)	전체 거래액 (백만원)	전국 대비 총괄 거래액 비율(%)
총계	4,772	100.0%	4,549,817	100.0%
경남	2,609	54.7%	1,726,943	38.0%
수도권	917	19.2%	1,393,600	30.6%
서울	481	10.1%	876,527	19.3%
인천	69	1.5%	58,415	1.3%
경기	367	7.7%	458,657	10.1%

자료:정성훈외,2021,국가혁신클러스터경쟁력진단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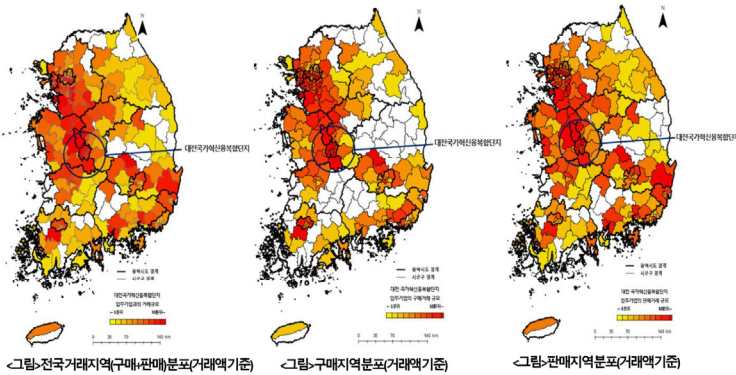
44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4. 지역혁신클러스터 : 국가융복합단지

4-4.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거래 구조 : 대전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거래 구조

- (대전) 거래 기업 수: 지역 내부 > 서울, 경기도 / 거래액: 지역 내부 < 서울, 경기도



<표> 대전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거래구매·판매지역분포(거래액기준)

지역	전체 거래 기업 수(개)	전국대비 총괄 거래기업 비율(%)	전체 거래액 (백만원)	전국 대비 총괄 거래액 비율(%)
총계	11,818	100.0%	4,627,944	100.0%
수도권	4,921	41.6%	2,643,075	57.1%
서울	2,288	19.4%	1,572,693	34.0%
인천	309	2.6%	116,650	2.5%
경기	2,324	19.7%	963,733	20.6%
대전	4,224	35.7%	712,428	15.4%

자료: 정성훈외, 2021, 국가혁신클러스터 경쟁력진단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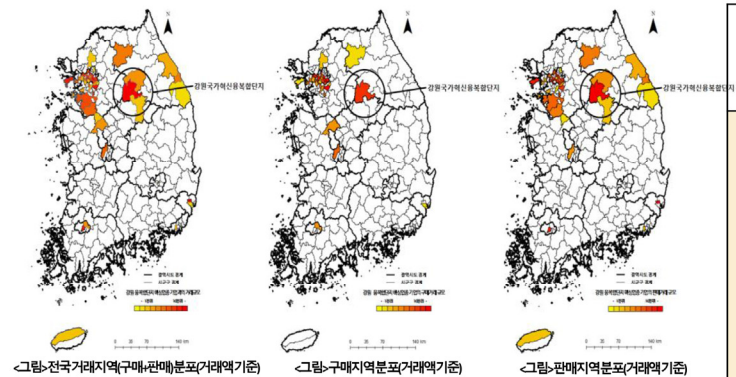
45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4. 지역혁신클러스터 : 국가융복합단지

4-4.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거래 구조 : 강원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거래 구조

- (강원) 거래기업 수, 거래액 모두 경기도 지역과의 의존도 高



<표> 강원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거래구매·판매지역분포(거래액기준)

지역	전체 거래 기업 수(개)	전국대비 총괄 거래기업 비율(%)	전체 거래액 (백만원)	전국 대비 총괄 거래액 비율(%)
총계	4,956	100.0%	5,757,898	100.0%
수도권	2,766	55.8%	4,175,626	72.5%
서울	1,106	22.3%	1,978,905	34.4%
인천	201	4.1%	131,399	2.3%
경기	1,459	29.4%	2,065,322	35.9%
강원	1,148	23.2%	528,282	9.2%

자료: 정성훈외, 2021, 국가혁신클러스터 경쟁력진단연구

46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5. 기업혁신파크 사업

5-1. 개요

배경 기업혁신파크는 기업 주도로 개발한 공간에 **법정부 지원을 연계**,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업도시 보완·추진**

- 앵커기업청년이 원하는 지역거점에 소규모로 신속한 개발투자 가능한 기업도시

특징 **민간주도 복합개발방식**의 기업도시 특징 유지

- 공공주도 선개발後기업유치 방식의 한계 보완
-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준 높은 정주여건(교육·의료·생활 등) 조성 가능
- 민간개발방식 중 공공성(균형발전)·수익성을 동시 추구

지원혜택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

대 상	내 용
사업시행자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법인세감면(3년 50%, 2년 25%)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배)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도시건축 특례 도입(제도개선 예정)
입주기업	▲신설·창업기업 법인세감면(3년 100% 2년 50%) ▲국공유지 임대료 20%감면 ▲창업보육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건립 등 지원(제도개선 예정)

47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5. 기업혁신파크 사업

5-2. 기업도시 및 기업혁신파크 비교(요약)

구 분	기업도시(현행)	기업혁신파크(개선안)
1. 개발관련 규제		
최소면적 완화	100만㎡	50만㎡
도시지역 개발	별도 규정 없음	(신설) 최소 10만㎡
인·허가 간소화	개발·실시계획 별도 수립 재해·교통 등 별도 심의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도시·건축특례	용적률 1.5배까지 완화 가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대폭 완화)
2.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시행자 지원	사업 추진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세제감면	(국세) 3년간 50%, 2년간 25% (재산세·취득세) 최대 50%
	사업비 지원	주진입도로 1개소 50% 지원
입주기업 지원	세제감면	<신설·창업기업 대상> (국세) 3년간 100%, 2년간 50% (재산세·취득세) 최대 50%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20% 감면
	정주여건 지원	유치원·대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개발이익 재투자대상확대	공공편익시설, 구역 밖 간선시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 “좌동” * 기회발전특구 등 유관 정책·사업과 제도적 연계 방안 지속 검토·결합 (추가)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지원시설 건립·운영, 산업·연구·업무 등 주용도 토지 분양가 인하
3. 공공성 확보		
지정제한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구역 지정제한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의 20% 이상을 지역입주기업을 위해 재투자	
토지이용규제	▲(주된용도) 가용지 30% 이상은 산업·연구·업무 등으로 조성 ▲(직접사용) 주된용도의 20% 이상은 시행자가 직접사용	

48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5-3. 기업혁신파크 사업모델 예시

구분	① ICT 혁신거점형	② BT 지역거점형	③ 제조혁신·고도화형
개념	광역권 및 강소도시권의 거점도시나 광역교통결절점 에 세سو 및 지식기반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ICT 서비스 집적 공간과 생태계 조성	BT산업 확장을 추진하는 대학·연구소·기업·지원기관 인근에 산업클러스터를 확대하는 산업생태계 혁신 및 정주 환경 지원 공간 조성	제조·공업도시의 산업단지 주변이나 유류 공업시설 에 세소기반 및 정주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제조 혁신 및 정주환경 지원 공간 조성
입지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및 기업이 소유한 중·소규모(10~30만㎡) 가능소토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중·고밀 복합공간 조성	기존 클러스터 인근(50만㎡ 이상) 또는 대학·연구소·기업 집적 주변 부지(10~30만㎡)를 BT산업·정주 특화지역으로 복합·확장개발	기존 산업단지 주변 부지(50만㎡ 이상) 또는 산업단지 내 중규모 가능 유휴공간(30~50만㎡)을 용도변경하여 산업·정주 복합개발
기능	ICT 혁신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주용도로 구성하며, 입주기업인재에 특화한 상업·주거·생활인프라를 공공·민간이 협력 조성	BT산업 및 산학연 협력 기능을 주용도로 구성하며, BT산업 근로자 정주지원과 교육·문화 공간을 공공·민간이 적시 조성·공급	제조·산업 및 지원 서비스를 주용도로 구성하며, 산단·공업지역 기능 고도화와 근로자 정주지원 공간을 공공·민간이 협력 조성
기능 구성 및 주요 공간 시설 예시	ICT 혁신	BT 거점	제조 고도화
	상업 복합	상업·교육	상업 복합
	주거 특화	주거 특화	주거 특화
	정주·생활 인프라	정주·생활 인프라	정주·생활 인프라

49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5-3. 기업혁신파크 사업모델 예시

구분	④ 노후공업지역혁신형	⑤ 산학연계·융합형	⑥ 지역특화거점형
개념	도시 내 노후 공업지역의 유휴부지 및 가능소토 지역 을 산업고도화와 신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복합 및 산업·정주 융합공간 으로 조성	지역 대학과 산업단지 인접 지역 에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활용한 기업 유치·창업을 지원하는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 육성공간 조성	지역 거점 및 신도시 유류 및 미개발 지역 의 사족기능 확대와 정주·일자리 균형 촉진을 위해 기업유치 및 지역특화 거점지역 조성
입지	도시 내 노후·쇠퇴 공업지역 유휴공간·부지(10~30만㎡)를 재정비하고 일부 용도변경하여 기업유치공간 확보 및 산업·정주 복합개발	기존 대학 및 산업단지 주변 부지 또는 유휴공간(50만㎡ 이상)을 용도변경 및 개발하여 산학연 융합 및 정주 지원 복합화	지역 거점·신도시 유휴공간(30~50만㎡) 및 인접 부지(50만㎡ 이상)을 용도·기능 재조정 및 지원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특화 기능 강화
기능	도시 내 수요가 많은 산업·기업공간을 주용도로 구성하며, 중·고밀 입체복합화와 직·주·락 기능 복합으로 도시 거점기능 수행	산학연 융합 및 기업육성공간을 주용도로 구성하며, 연구자 및 창의인재 특화 정주지원 공간을 민간·대학이 협력 조성	지역 거점화를 위해 특화하는 산업 및 기업 유치공간을 주용도로 구성하며, 특화 산업군 및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고도화
기능 구성 및 주요 공간 시설 예시	기업 유치	산학연 융합	지역 특화
	상업 복합	상업·교육	문화·물류
	주거 특화	주거 특화	주거 특화
	정주·생활 인프라	정주·생활 인프라	정주·생활 인프라

50

IV. 열린 특구정책과 그 경쟁자들

6. 메가샌드박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제안 (2023년 2월 15일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회의)

**메가
샌드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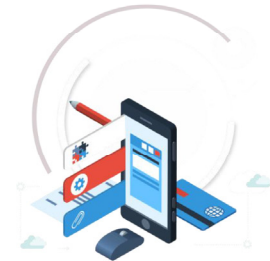
산업과 지역 단위의 통합 샌드박스를 추진해 미래 산업 육성
(최태원 新 메가 샌드박스론: 기업 아닌 산업 단위로 규제 유예하자)

- 기존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을 실증하는 기업들에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지역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
- "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실증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가 '규제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
- 규제 샌드박스가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더불어 미래 산업,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
-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의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조성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
- **산업과 지역 단위의 포괄적인 규제 유예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확산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

※ '메가샌드박스'는 정책실험의 단위를 규제혁신 중심에서 금융, R&D, 교육, 세제, 노동,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등을 한꺼번에 풀어 보자는 것
 >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샌드박스 도입 필요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V. 결론 : 특구발전을 위한 제언



V. 결론 : 특구 발전을 위한 제언

민간(기업) 주도형 지역혁신생태계 고도화와 지역주도형 지역 혁신체계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

- R&D 예산의 축소 등 정부지출 R&D 비용의 축소로 인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지역혁신생태계의 균형점 확보를 위해 기업중심의 혁신생태계에 초점을 두면서 '테크노파크(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중소벤처기업부 중심의 테크노파크)로 이행' 과정과 긴밀한 연계 확보 필요(그들만의 리그 지양)

지역 간·기능 간 지역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특구 간 통합적 추진체계 필요

- 특구별 각개약진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핵심 기능들을 지역 간·기능 간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생태계 활성화 및 정책적 효율성 강화 필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 재편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역량 공유 체계 구축 필요

- 지역이 지닌 지식·제도·자본 역량과 수도권-비수도권 거래 구조에 기초한 산업화 잠재력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특구 사업 간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

53

감사합니다!



